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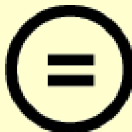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공학석사 학위논문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의 현황 및 정책적 대응방안



2016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기술경영협동과정

김 태 형

공학석사 학위논문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의 현황 및 정책적 대응방안

지도교수 김 민 수

이 논문을 공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기술경영협동과정

김 태 형

김태형의 공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8월 26일

위원장 공 학 박 사 옥 영 석 (인)

위 원 공 학 박 사 신 승 준 (인)

위 원 공 학 박 사 김 민 수 (인)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13
 II. 본론	 19
1. 이론적 고찰	19
가.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쉼비기업 정의	19
나. 정부지원사업 현황과 실태	27
2. 연구방법 및 분석내용	39
가. 분석자료	39
나. 분석방법	41
다. 분석내용	43
라. 분석결과	50
3.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55
 III. 결론	 76
1. 결론	76
2. 시사점	84
3.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88

표 목 차

표 01. 외부대상기업의 잠재부실 지속정도	5
표 02. 연도별 R&D 예산내역(본예산기준, 단위 : 조원)	28
표 03. 연도별 R&D 지원현황	29
표 04. 정부의 R&D 지원현황('10년~'13년)	30
표 05. 정부의 R&D 지원현황	31
표 06.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 및 전달체계의 유형화	35
표 07. 매출규모 대비 지원규모 비중	45
표 08. 지원기업의 고용인원 비중	45
표 09. 제조업 기업규모별 중소기업 비중 추이	61
표 10. 제조업 기업규모별 생산성 증가율	63
표 11. 일본, 미국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성(대기업=100 기준) 추이	64
표 12. 6대 중소·중견기업 R&D 패러다임 전환	85

그림목차

그림 01. 일본의 좀비기업 비중 추이	2
그림 02. 규모별 한계기업 추이	6
그림 03. 한계기업 및 만성적 한계기업 현황	7
그림 04. 2015년 기준 주요 조선사 금융사 부채 현황	11
그림 05. 연구개발지원최종 목표	17
그림 06. 부실기업 비중	22
그림 07. 이중부실기업 수	24
그림 08.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	25
그림 09. 2016년 분야별 예산	27
그림 10. 2015년 R&D 예산내역(본예산기준)	28
그림 11. 정부지원시책 중복성 발생	37
그림 12. 분석과정	42
그림 13. 2013년 대비 2014년 지원기업 매출규모	43
그림 14. 2013년 대비 2014년 지원기업 지원규모	44
그림 15. 기업 매출액 대비 정부지원사업 지원액 비중	46
그림 16. 한국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47
그림 17. 연도별 기업당 중복지원건수	48
그림 18. 지원 후 폐업기업	49
그림 19.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 분포	51
그림 20. 연도별 좀비추정기업 매출액 규모	52
그림 21. 연속 좀비추정기업 연도별 매출 규모 비교	53
그림 22. 통합관리 신청시스템 체계도	56
그림 23. 기업 좀비화의 원인	58

그림 24.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화 대응 체계	66
그림 25. 기업 이윤창출 프로세스	68
그림 26. 지속적 이윤창출 프로세스	69
그림 27. 사례분석을 통한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화	70
그림 28. 정부지원사업 연관어 관련 웹카페 검색결과(단위: 개)	71
그림 29. 인터넷 검색화면 1	72
그림 30. 인터넷 검색화면 2	73
그림 31.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의 대응	75
그림 32. 제조업: 기업규모별 좀비기업수 비중 추이 (%)	77
그림 33. 한계기업 자산비중추이	77
그림 34. 대기업에 대한 국책은행 금융지원 비중	78
그림 35. 제조업 기업규모별 종사자 수 연평균 증가율	80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의 현황 및 정책적 대응방안

김 태 형

부경대학교대학원 기술경영협동과정

요 약

장기불황과 금융위기를 거치며 자생능력은 부족하나 정부의 자금지원으로 생존하는 부실기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좀비기업 외에도 정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이용하여 연명하는 부실기업들도 존재한다. 이들은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정부 R&D자금을 소모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사전 선별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의 개념을 기존의 좀비기업의 개념과 구분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이들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의 현황과 선별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이들 기업의 식별을 위한 참조 기준으로써 지원사업 금액이 회사의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부실기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기업정보를 공통 데이터베이스에 장기적으로 수집하여 기업규모에 따라 금액과 지원횟수 및 지원기간의 합리적 제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정부지원사업의 대상을 보다 신중히 선별하여 지원한다면, 기업의 실질적인 대내외 경쟁력 증대와 함께 정부지원사업의 실효성 및 기업 매출 증가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Present State and Response Policy
on Government
support dependent Zombie Company

Tae hyung Kim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Management of Technology,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While passing through the prolonged recession and financial crisis, insolvent companies that lack substantiality and cling to government supported funds become the major source of growing concerns. In addition to these zombie companies, there also exist some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that live with government supported R&D programs. Identifying and screening all of those companies beforehand is very important to enhance of effectivity of government supported R&D programs since they consume and divest limited R&D funds from their righteous investment. In this paper, a broad concept of government support dependent zombie company is newly defined while differentiating the meaning from the conventional zombie company. Its existential status in various R&D programs is also studied in detail. After this, several suggestions are made to identify and screen these government support dependent zombie companies from the sound companies. The amount of supported R&D funds over each company's sales volume is suggested as a reference indicator for these zombie companies. To more effectively sort out these insolvent companies from the various government supported R&D programs, a common data base that collects basic corporate information together with their total number of support, and the sum of funds over a long period of time is needed. With all these data at hands, it is needed to

set a standard for reasonable support.

If the selective support is conducted while referring the result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o have enhanced corporate competitiveness and effective government R&D programs.



I. 서론

1. 연구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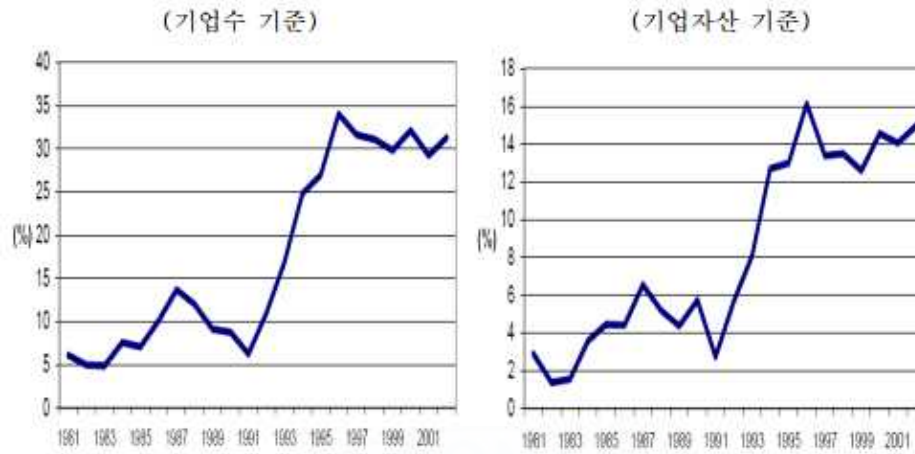
지난 2007년, 미국의 10대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인 미국의 5대투자은행인 베어스텝스, 리먼브라더스, 메릴린핀치가 파산하면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만이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 엄청난 파장과 위기를 불러왔다.

국제적 금융위기로 많은 국가들에서 대규모 자본이 급속히 유출되고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는 등 엄청난 고통을 겪었으며, 지금도 상당수의 국가에서 그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높은 대외 무역 의존도를 보이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기업들이 외적인 요소로 야기되는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조정 및 금융개혁추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는 아직 완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잠재 부실기업의 정리와 해결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일본의 경우, 은행의 방만한 금융지원에 이어 거품경제의 붕괴로 인해 10여 년이 넘는 기간의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기로 인한 부실기업의 증가는 경제회복에 또 다른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정부당국의 방만한 금융지원과 부실기업에 대한 대응으로 좀비기업이 만연하게 되었다.



자료: Caballero, Hoshi and Kashyap (2009)

그림 1. 일본의 좀비기업 비중 추이

Caballero, Hoshi and Kashyap(2009)은 199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의 주요 원인을 좀비기업에 대한 은행의 관용적 대출행태에 기인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류한 결과 일본의 좀비기업 비중은 1993년 이전까지는 업체수 기준으로 5~10% 수준이었으나, 1994~96년 기간 중 급상승한 후 2002년까지 30% 이상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자산규모를 반영한 좀비기업 비중 추이도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수준은 업체수 비중보다 낮은 수준 (1990년대 중반 이후 약15%)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상장업체에서 좀비기업이 많이 발생하였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금융지원을 받는 좀비기업의 비중이 증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기로 인해 구조조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을 경우 경제 내의 자원 재 배분을 통한 생산성 제고기능이 마비되어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의 저생산성구조가 고착화되어 장기불황이 초래 될 위험이 있다.

일본의 경우가 실제 부실기업을 정리하지 못하고 연명시킨 것이 20년간의 장기적인 경제침체를 유발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IMF 사태 이후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실기업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도 계속해서 부실기업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좀비 기업의 분포와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국가 장기 침체 사태를 예견하고 대비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는 좀비기업을 지칭하는 말로 한계기업¹⁾이라는 표현을 쓴다.

2011년도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1997-98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부문의 부채상환능력이 평균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부실징후를 보이는 기업들이 여전히 상당 수 존재하고, 특히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부문이 제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현재 전체 표본에서 이자보상배율²⁾ 1배 미만 기업체수가 6,058개사(총차입금 237조원)로서 총 표본기업수의 무려 40%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의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 기업체수 비중은 48%에 달하고 제조업의 경우는 31%이다.

이자보상배율 3년 연속 1배 미만 상태인 기업을 부실극심기업, 즉 좀비

1) 한계기업 :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3년 연속 1미만인 기업으로 돈을 벌어서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2) 이자보상배율 : 기업이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기 위한 지표다. 영업이익을 지급이자 비용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zombie)기업으로 정의하고, 이들 기업들을 세부 업종별로 파악한 결과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2009년을 포함해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인 좀비기업수는 2009년 현재 표본에서만 무려 2,635개사에 달하고 전체 기업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좀비기업들의 총차입금은 115조원에 달하고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에서 좀비기업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2009년 현재 서비스업의 좀비기업수는 총 1,908개가 존재하여 전체 서비스업체수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에서는 좀비기업수가 727개로서 전체 제조업체수의 10%로 추정되었다. 기업규모별 좀비기업수는 대기업부문에서 182개사(전체 대기업체수의 11%), 중소기업부문에서 2,453개사(전체 중소기업체수의 18%)에 달하고 있다.

표 1. 외부대상기업의 잠재부실 지속정도

			이자보상배율 < 1		
			2009	2년 연속	3년 연속
제조업	소계	업체 수 (총 7,128사)	2,236 (31)	1,292 (18)	727 (10)
		차입금 (총 232.7조원)	55.4 (24)	35.6 (15)	18.3 (8)
	대기업	업체 수 (총 683사)	161 (24)	98 (15)	63 (9)
		차입금 (총 147.1조원)	23.3 (16)	18.3 (13)	8.5 (6)
	중소기업	업체 수 (총 6,445사)	2,075 (32)	1,194 (19)	664 (10)
		차입금 (총 85.7조원)	32.0 (37)	17.3 (20)	9.8 (12)
서비스업	소계	업체 수 (총 8,008사)	3,822 (48)	2,783 (35)	1,908 (24)
		차입금 (총 308.1조원)	182.3 (59)	139.3 (45)	97.0 (32)
	대기업	업체 수 (총 909사)	291 (32)	190 (21)	119 (13)
		차입금 (총 131.4조원)	55.1 (42)	33.6 (26)	15.5 (12)
	중소기업	업체 수 (총 7,099사)	3,531 (50)	2,593 (37)	1,789 (25)
		차입금 (총 176.7조원)	127.2 (72)	105.7 (59)	81.5 (46)
전 산업	소계	업체 수 (총 15,136사)	6,058 (40)	4,075 (27)	2,635 (17)
		차입금 (총 540.9조원)	237.7 (44)	174.9 (32)	115.3 (21)
	대기업	업체 수 (총 1,592사)	452 (28)	288 (18)	182 (11)
		차입금 (총 278.4조원)	78.5 (28)	52.0 (19)	24.0 (9)
	중소기업	업체 수 (총 13,544사)	13,544 (41)	3,787 (28)	2,453 (18)
		차입금 (총 262.4조원)	159.2 (61)	123.0 (47)	91.4 (35)

주: () 안의 수치는 해당 업체의 전체 외감업체 수 대비 비중 및 전체 외감업체 차입금대비 비중.

출처 : KDI 연구보고서(2010-06)

한국은행이 2015년 낸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4년 말 현재 한계기업은 전체 외부감사 대상 기업³⁾의 1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계기업수는 무려 3,295개나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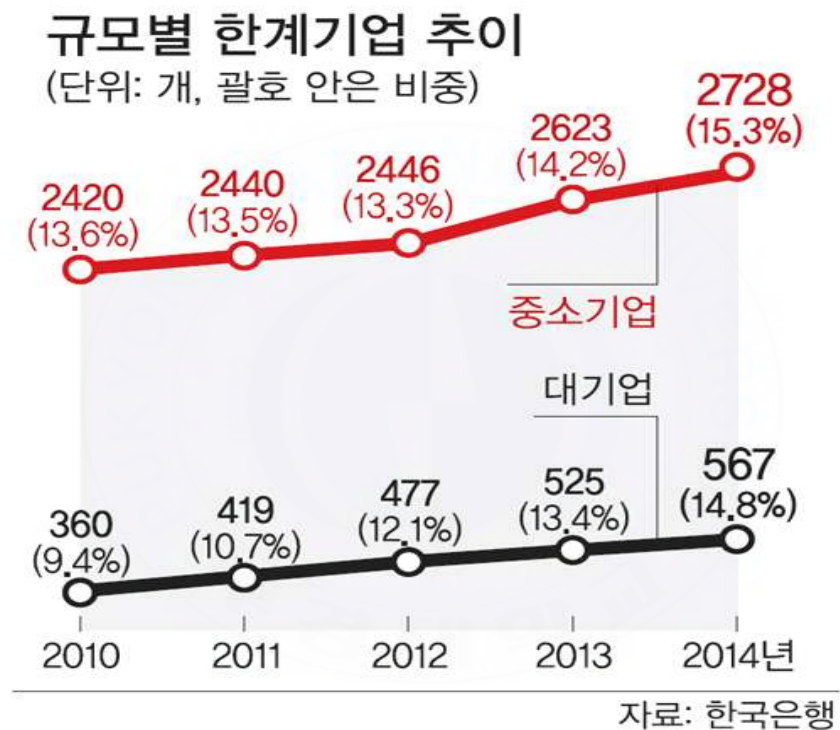


그림 2. 규모별 한계기업 추이

3) 외부감사 대상 기업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비금융 법인으로 25,452개(2009~2014년 중 폐업업체 포함)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자산규모 백억원 이상인 기업이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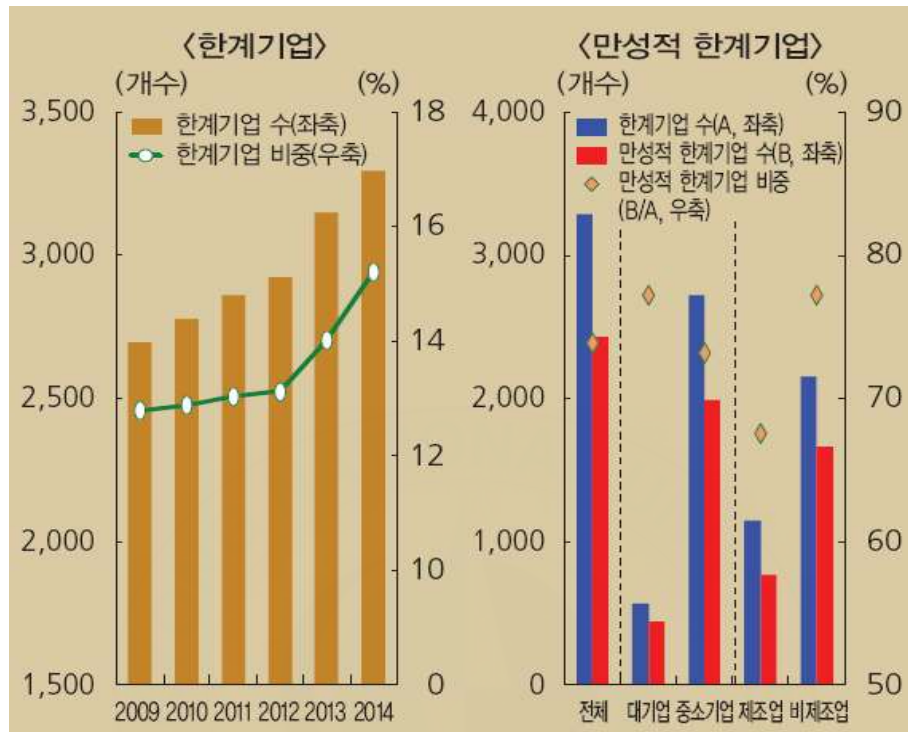


그림 3. 한계기업⁴⁾ 및 만성적 한계기업⁵⁾ 현황

출처 : KIS-Value

이는 지난 2009년(12.8%, 2,698개)보다 2.4%포인트, 6백개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들 한계기업 가운데 지난 2005년~13년 중 한계기업 경험이 있는 만성적 한계기업은 2,435개나 된다.

2014년말 현재 한계기업의 4분의 3 정도가 돈을 벌어서 이자도 갚지도 못하면서 2000년대 중반부터 계속 연명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중 한국이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

4) 한계기업 : 이자보상비율 3년 연속 100%미만 기업

5) 만성적 한계기업 : 2014년 말 현재 한계기업 가운데 2005~2013년 중 한계기업 경험이 있는 기업

업 파산율이 가장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정부가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는 대신 연명하도록 지원하면서 ‘좀비기업’으로 불리는 만성적 한계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진단이 가능한 부분이다.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것은 낮은 수준의 사회안전망 때문이기도 하다. OECD는 한국 정부의 중소기업 대출보증이 좀비기업의 연명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출처: 경향비즈 2016.4 조형국)

OECD 한국대표부는 한국의 중소기업 파산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가장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OECD 분석에 따르면 2007년의 중소기업 전체 파산을 1로 봤을 때 2014년 한국의 중소기업 파산은 0.37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2007년 파산한 기업이 100곳이라면 2014년에는 37곳으로 대폭 줄었다는 뜻이다.

한국에 이어 캐나다(0.48), 뉴질랜드(0.53), 그리스(0.64) 등의 순으로 중소기업 파산이 감소했다.

반면 헝가리(4.22), 이탈리아(2.55), 노르웨이(1.92) 등은 2007년에 비해 중소기업 파산이 크게 늘었다.

중소기업 파산이 줄어든 이유는 두 가지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 실제로 파산 위기에 처하는 기업이 감소했거나, 한계기업들이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면서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후자에 해당한다고 OECD는 판단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의 중소기업 대출보증 비율에서도 상위권이었다. GDP 대비 정부의 중소기업 대출보증 비율은 그리스 9.2%로 가장 높았고 일본 5.7%, 한국 4.1% 순으로 나타났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OECD는 한국의 중소기업 대출보증이 좀비기업 연명 수단이 되지 않도록 내실화해야 한다고 경고 한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으로 인정만 받으면 창업기업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기술애로 멘토링지원사업 자금 등 40여 개에 이르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을 비롯해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들이 내놓는 중소기업 지원정책만 해도 557개에 이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누적된 적자로 당장 문을 닫아도 이상할 게 없는 좀비기업들이 정부 지원에 의존하면서 계속해서 생존이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좀비기업들은 기술혁신으로 사업을 키우기보다 보다 쉽게 정부 예산 지원받기에만 몰두하여 온갖 지원 혜택을 차지하려 한다.

특히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자금은 좀비기업의 좋은 ‘먹잇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중소기업을 상대로 2만6012개의 R&D 사업을 지원했는데 지원받은 기업 수는 1만5935개다. 35%가 2회 이상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무려 42차례나 R&D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도 있었다.

정책금융기관의 중복 지원도 심각하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말 현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 200조 원 가운데 약 36%는 중복 대출이었다.

이런 현상은 창조경제, 기술금융 등 국정과제의 실적을 채우기 위해 정부 부처들이 각종 지원정책을 수립한 결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 세금에 의존하는 부실기업이 많아지면 정상 기업의 고용과 투자 감소, 산업 구조조정 지연 등의 과정을 거쳐 전반적인 경제성장률의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또 재정 지출 확대나 금리 인하 등 정부 정책의 비효율성도 커진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고 금리를 내려도 경기 부양 효과가 반감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한계기업들의 퇴출이 지연되면 경제 전반의 역동성도 저하될 위험이 있다.

‘정부 지원→기술 혁신 성공→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이라는 선순환 대신 ‘정부 지원→적자 보전하며 연명→기업 경쟁력 약화→정부의 추가지원’이라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한 산업 내 좀비기업의 자산 비중이 높을수록 정상 기업들의 고용과 투자가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고서를 냈다.

같은 보고서에서 현재 15.6%로 추정되는 부실기업의 자산비중을 5.6%로 낮추면 새로운 일자리 11만 개가 생길 것이라고 추산한 바가 있다.

전문가들은 실적이 좋은 일부 대기업들을 제외하고 분석할 경우 한국 경제의 부실기업 문제가 훨씬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조선산업의 위기로 인해 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조선업체들 처리문제는 관련 지역과 정치적 상황이 맞물리면서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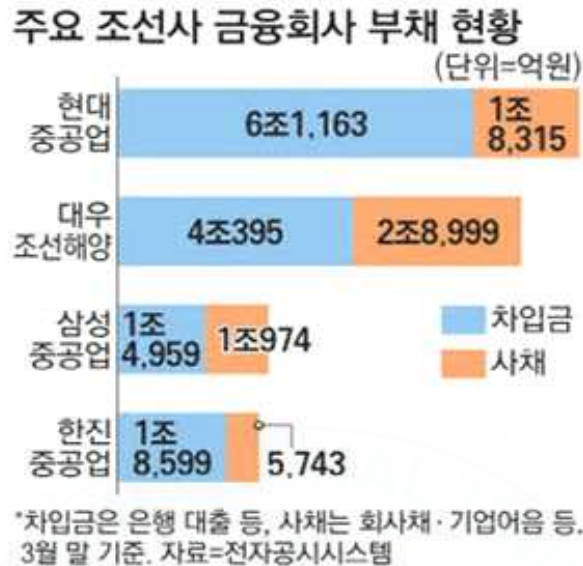


그림 4. 2015년 기준 주요 조선사 금융사 부채 현황

이러한 부실기업들을 정리하는 가운데 국책기관이 다시 지원을 나서기로 해서 추가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전에 수조원 자금을 투입하고도 채권단이나 국책기관에 더 많은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여전히 회생가능성은 희박한 게 현실이다.

이러한 좀비기업들이 만연하고 또 다른 부실기업들이 추가로 발생하는 가운데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좀비기업들도 아주 많이 존재할 것이라 판단 된다.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면서 대량 실업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정상기업의 고용을 11만명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발표되기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3년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15.6%인 좀비기업의 비중을 10%포인트 낮추면 정상기업의 고용을 11만명 가량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한 산업의 좀비기업 자산 비중이 10%포인트 높아지면 해당 산업에 속한 정상기업의 고용 증가율이 0.53%포인트, 투자율이 0.18%포인트 하락한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된 것이다.

퇴출돼야 마땅한 부실기업이 금융지원으로 연명하면서 한정된 시장 수요를 잠식하고, 노동·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만든다는 우려를 실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부실기업이 구조조정되면 단기적으로는 실업이 발생하지만 정상기업을 중심으로 노동과 자원이 투입되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좀비기업을 정리하고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2. 연구 목적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의 위상과 그에 대한 관심은 경제발전의 궤도와도 맞물려있다. 1960년대 초부터 1980년대 초까지 정부의 강력한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은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70년대의 중화학 공업화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용이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고착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급속한 산업구조 변화와 더불어 수출확대를 통한 개방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집중 지원은 계속되었다.

취약한 중소기업의 발전과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1960년대 이후 정책지향점이 변화하기는 하였으나 40년 간 지속되어왔다. 중소기업정책의 태동기였던 60년대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61), 단체주의계약제도(1965), 중소기업기본법(1966) 등 중소기업지원 육성을 위한 법률과 제도가 마련되었으며, 중화학공업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70년대에는 부품공급 생산 주체로서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함에 따라 고유업종제도(1979), 지정계열화제도(1980)의 마련과 신용보증기금(1976), 중소기업진흥공단(1979), 기술신보(1989)의 설립 등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과정에서 파생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시책을 전개해 왔다.

그러던 것이 90년대 이후 WTO체제가 출범(1995년 1월)하면서 자율과 개방, 경쟁중심으로 경제운용이 전환되었으며, 96년 2월 중소기업청 설립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들이 추진되어 왔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1997년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면서 중소벤처기업 육성이 산업정책의 중심으로 부상하였다.

당시 외환위기의 원인이 재벌 중심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 초래된 경제구조 불균형의 극대화로 인식되면서 벤처 중심의 중소기업 육성이 산업조직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외환위기 당시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재벌로부터 중소 벤처기업으로'의 이행을 산업정책의 기조로 내세움으로써 그 한계가 명백해진 재벌경제의 대안으로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였다.

그 결과 2002년 기준으로 IT중심의 벤처기업만 2만 2천여 개에 이르고, 특별법에 의해 확인된 중소 벤처기업의 수도 1만 여개를 넘어선다.

특히 같은 해 정부가 확인한 신기술평가기업은 총 6,329개로 전체의 72% 정도에 이른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계속 증가하였다. 기술인력 등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창업 활성화 및 신기술 사업화, 공정경쟁과 대 중소기업간 협력 강화 등이 주요 의제로 상정되었으며, 중소 벤처기업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시책이 크게 증가하였다. (출처 이병헌, 장지호 2006)

그러나 이러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시책들은 옥석을 가리는 합리적인 과정이 없을 경우, 부실한 중소기업의 지원으로 이어져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할 부실기업들이 정부자금에 의존하여 좀비화되고, 계속해서 연명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KDI 보고서에서는 좀비기업의 부정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 번째 부정적 효과는 좀비가 정상인 사람을 공격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겠다. 좀비기업은 한정된 시장수요를 잠식하고 노동 및 자본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정상기업의 고용 및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좀비기업이 없는 경우에 비해 정상기업은 생산한 제품을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야 하며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에도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KDI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산업 내 좀비기업 자산비중이 10%p 증가할 경우 정상기업의 고용증가율은 0.53%p, 투자율은 0.18%p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15.6%로 추정되는 좀비기업 자산비중을 5.6%로 10%p 낮추면 정상기업의 고용이 11만명 정도 늘어난다고도 한다. 최근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만명 대 중반인 점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두 번째 부정적 효과는 기업생태계를 정체시키는 효과다. 신규 기업의 진입과 기존 기업의 퇴출은 시장경제의 발전에서 핵심과정이다. 생산성이 높은 신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면 고비용 저효율의 기존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시장 전반의 생산성이 향상된다.

슈페터는 이를 ‘창조적 파괴과정(creative destruction)’이라 일컬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만약 퇴출돼야 할 기업이 금융지원에 의해 소생해 시장에 남아 있게 된다면, 신규 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게 된다. 이로 인해 기업생태계는 역동성을 잃고 성장을 멈추게 된다. 김준경 KDI 원장 표현을 빌리자면, 최근 우리나라에서 좀비기업이 증가해 시장 진입 및 퇴출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은 ‘속된 말로 신진대사가 안 돼 우리나라 산업이 변비에 걸린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과거 사례는 이와 같은 기업생태계의 경화(sclerosis)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초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일본 상업은행들은 자본적정성 훼손을 우려해 정상기업의 여신은 축소한 반면, 부실기업에는 오히려 자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좀비기업이 증가했고 저생산성 기업의 퇴출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학계의 분석에 의하면, 10여년에 걸쳐 좀비기업 비중이 10%p 증가한 결과 평균적으로 산업별 총요소 생산성⁶⁾ 증가율이 4%p가량 저해됐다고 한다. 선진국들의 경제성장이 대부분 총요소 생산성 증가에 의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좀비기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성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임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와 같이 장기적인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얘기된 최근 국제적 경제위기로 인해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⁷⁾이 매우 빠르게 낮아지고 주력 산업의 기업들까지 이익창출 능력이 크게 저하된 가운데 일반적인 좀비기업과 달리 정부지원책을 이용하여 기술개발 자금명분으로 중복 지원을 통go 연명하는 중소중견 기업들이 새로운 좀비기업의 유형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좀비기업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로 인한 지원자금의 잠식을 줄여서 부실기업이 아닌 기업에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의 추정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좀비기업들이 금융권의 자금지원을 통해 연명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과 달리, 정부의 수많은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명하는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들은 부채와 같은 통상의 금융지표를 통해 판단되기에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지원사업의존형 좀비기업의 개념을 정의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 기업을 선별하여 합리적인 지원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6)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이란 전체 생산요소의 결합적 투입에 대한 전체 산출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성을 분석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는 지표입니다.

7) 잠재성장률(Potential Growth Rate)이란 한 나라 경제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한다.

정부지원사업의 실효성 증가와 기업 생산성의 증가를 이루기 위한 효과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최종 목적은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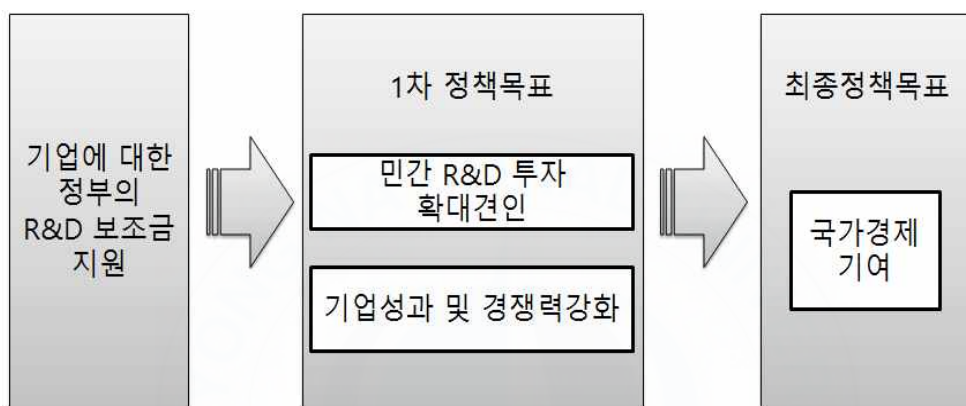


그림 5. 연구개발지원최종 목표

이러한 최종 정책목표는 중간 단계의 정책목표를 통해 건인되는데,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가 그것이다. 즉, 정부의 기업 지원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건인하는 마중물(priming water)의 역할을 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고용 증진, 세수 증진 등 국가 경제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직접보조금의 효과는 기업의 추가적인 연구개발 투자 또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 유무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기업지원금에 대한 효과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비기업에 대한 금액지원이 정상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기업지원의 목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목적은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의 개념을 보다 자세히 정의하고, 이러한 부실기업들의 판단 지표로 참조될 수 있는 척도를 제시함으로써,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의 발견 가능성이 높은 기업군의 범위를 쉽게 발견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판단 지표의 설계를 위해서 대상기업들의 매출, 지원금 규모와 지원횟수 등에 대한 각종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련 기준을 제시하고 한다.



II. 본론

1. 이론적 고찰

가.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 정의

1) 좀비기업

일반적으로 회생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채권단의 지원을 받아서 파산을 간신히 면하고 있는 기업을 좀비기업이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좀비기업을 정의하는 공식적인 기준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좀비기업이라는 말은 1990년대 초에 역사적인 미국의 저축대부조합 부실 사태에서 비롯된 좀비은행에서 유래했다.

저축대부조합은 우리나라의 경우로 볼 때 오늘날의 "저축은행"하고 비슷한 기관으로, 모기지론이 탄생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모기지론은 장기주택담보대출인데 원래는 보험사 등에서 처음 시작했으나 이후 저축대부조합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떠오르게 된다.

이후 1980년대 이후 저축대부조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들은 일반대출 및 신용카드 등도 취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업용 부동산에도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활성화된 저축대부조합은 부동산 대출을 크게 일으키며 시장에 거품을 일으키게 되었다.

하지만 부동산 거품이 꺼지자마자 이 저축대부조합들이 파산 지경에 몰리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사실 저축대부조합의 쏠림형 대출 포트폴리오, 낮은 자기자본비율 등은 1980년대부터 전문가들이 우려해오던 부분이었으나 미국은 오히려 회계규정을 바꿔 규정을 완화해주는 등 굵은 상처를 키우는 방식으로 대처했고, 문제를 더욱 키우고 말았다.

문제는 이들 저축대부조합에 대한 정리가 들어가기 시작한 1989년, 이들 저축대부조합들은 실제적으로는 돈이 없어 지급불능사태였지만 정부가 정리 과정 중에서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면서 "일시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를 두고 당시 에드워드 케인즈 미국 보스턴대학 교수는 이들 은행이 "회계상으로도, 실질적으로 죽었지만(은행 업무가 아예 불가능하지만) (정부의 지원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군다"는 데서 좀비은행(Zombie Bank)라고 비꼬았고, 이 단어가 널리 확산되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2002년 에드워드 케인즈 교수가 죽었지만 산 은행들을 좀비은행이라고 불렀다는 데 착안, 특집 기사에서 일본의 경제 상황을 다루면서 좀비기업(Zombie Company)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당시 일본에서도 1980년대 버블 시기가 끝나고 잃어버린 10년이 찾아오면서 정부와 금융권의 지원 하에 수익은 내지 못하고 겨우겨우 생명 연장을 해오던 은행이나 기업들이 많았는데 이들을 통틀어서 좀비기업이라고 통칭하였다.

2009년 이 좀비기업이라는 단어가 다시 미국에서도 이슈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인해 구제금융을 받게 된 미국의 은행들 때문이었다.

이들은 고위험 모기지론을 10년 전 저축대부조합들처럼 무리하게 운용해오다 거품이 꺼지면서 무너지게 되었지만 이들 투자은행, 상업은행들이 무너지면 미국의 경제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

에서 구제금융이 이뤄지게 된다.

때문에 시티은행,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의 은행이 미 정부의 금융지원으로 살아남게 되었고, 후에 이를 두고 2009년 미국 뉴스위크 지는 "이 때 구제금융으로 살려준 은행들이 잃어버린 10년 때 일본 은행들의 뒤를 밟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좀비기업이라는 단어를 다시 언급하게 되었다.

사실 국내에서는 경제분야에 많이 쓰이는 ‘좀비기업(Zombie Company)’이란 말의 뜻은 좀비처럼 자체 능력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지만 정부나 은행의 도움으로 근근이 생명을 이어가는 기업으로 금융지원에 의해 퇴출이 지연되고 있는 잠재적 부실기업으로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인 동시에 금융지원(만기연장 혹은 이자보조)을 받은 기업과 이자보조에 의해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1 이상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최저이자비용을 적용하여 재자산할 경우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으로 하락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자보상배율이 1 보다 작다는 것은 한 해 벌어들인 돈으로 빌린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을 의미한다.

기업이 돈을 벌지 못하고 되레 손해를 입었다면 즉, 영업손실을 입었다면 이자보상배율은 마이너스가 된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이러한 빛을 지는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된다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희박하며 이로 인해 부실기업으로 변해갈 가능성이 높기에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을 좀비기업(부실기업)이라 통칭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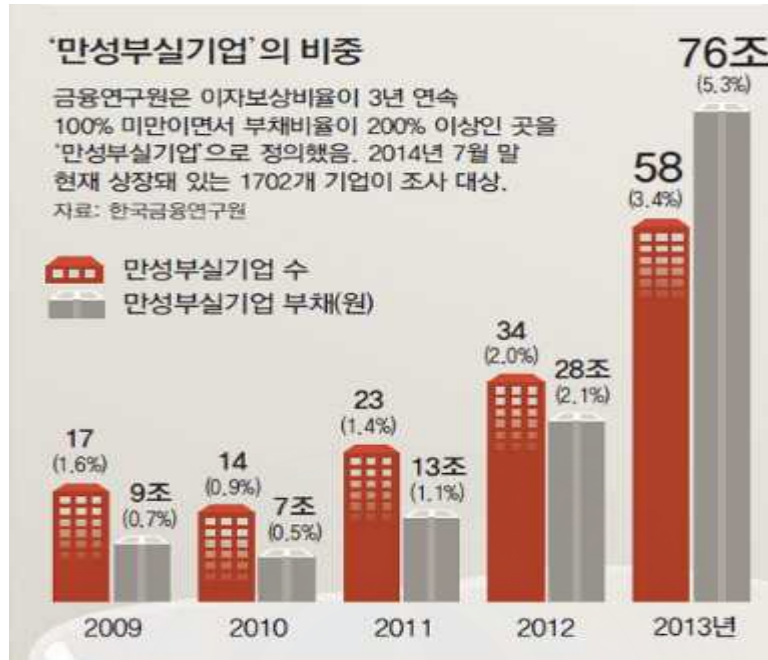


그림 6. 부실기업 비중

한국의 경우 최근 몇 년 동안 좀비기업이 늘어난 추세다. 한국은행이 2015년 6월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계기업 비중은 2009년 12.8%(2,698개)에서 2014년 말 15.2%(3,295개)로 증가했다.

특히 한계기업 중 73%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2005년 이후 한계기업 경험이 있는 만성적 한계기업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의 한계기업 비중도 2009년 9.3%에서 2014년 14.8%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금융사와 2015년 사업보고서·연결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을 제외한 380개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을 조사한 결과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이 33개사(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33개 좀비기업의 2015년 영업손실은 총 5조,1146억 원에 달해

기업당 평균 1,550억 원의 영업손실을 낸 셈이다.

33개 좀비기업을 업종별로 따져보면 건설 및 전자재 관련 기업이 9개로 가장 많았다. SK건설, 한화건설, 두산건설, 한라, GS글로벌건설, 경남기업, KCC건설, 동부건설, 알파돔시티 등이 3년째 이자보상배율 1미만을 기록했다.

이어 석유화학과 조선기계설비 업종 기업이 각각 6곳으로 뒤를 이었다. 조선기계설비 분야에서는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STX조선해양, STX중공업, 한진중공업, 두산엔진 등이, 석유화학 부문에서는 현대코스모, OCI, 엑사켄, 이수화학, 삼남석유화학, 롯데정밀화학 등이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송업체 중에서는 한진해운, 현대상선, 아시아나항공 등 3곳이, IT전자와 철강업체 중에서는 대한전선과 LG실트론, 동부제철과 대창 등이 해당됐다.

이렇듯 흔히 말하는 좀비기업의 경우 이자보상배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료가 공개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 대형회사들이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이들 좀비기업을 지칭하는 데에는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다. 이는 정부나 은행의 도움 즉, 외부의 도움이 아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측면에서 이를 바라본다면, 이들 기업은 자금지원을 통해 부실기업을 안고 가는 경제상황을 악용하여 정부자금을 지원받아 전체적인 경제부실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좀비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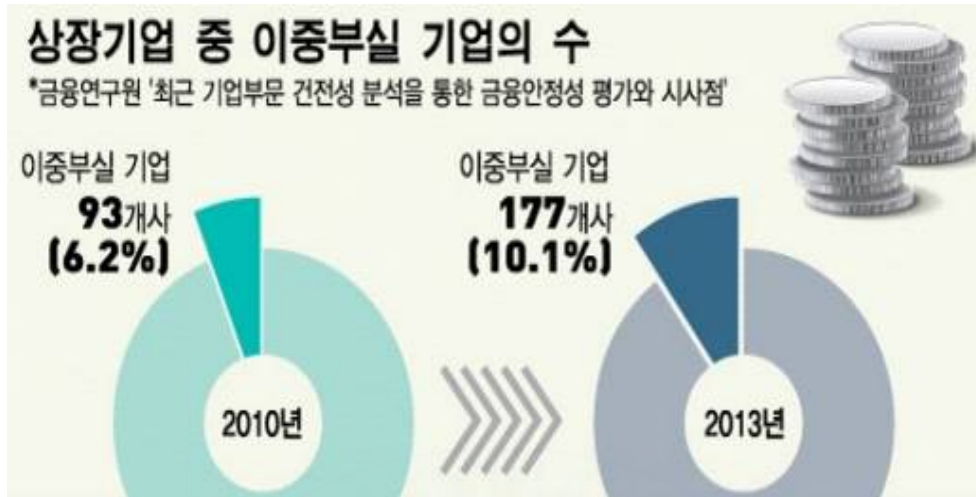


그림 7. 이중부실기업 수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이자보상비율 100% 이하인 동시에 부채비율 200% 이상인 이중(二重) 부실기업은 2010년 상장기업의 6.2%(93개)에서 2013년 10.1%(177개)로 늘었다.

KDI는 "금융권의 만기연장과 이자보조를 받은 잠재부실기업을 좀비기업으로 정의할 경우 좀비기업의 비중은 2010년 13.0%에서 2013년 15.6%로 늘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지원사업의존형 좀비기업은 그와는 다른 규모의 기업과 방식으로 정의를 내려 볼 수 있을 것이다.

(2)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



그림 8.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

출처 : 미래에셋

금융지원에 의해 퇴출이 지연되고 있는 잠재 부실기업인 경제적 분야의 좀비기업 외에도, 정부의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부지원사업을 통한 기업지원 금액을 제품개발과 시장개척 등의 다양한 핑계로 여러 정책과 지원프로그램으로부터 지원받아 연명하는 기업이 있다.

한마디로 정부의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을 활용해 연명하는 기업을 말한다.

각 정부부처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해 매년 수 천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은 관련 사업에 지원하여 수혜 기업으로 선정된 후에는 기술개발, 마케팅, 고용지원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단기간, 단발성 지원신청이 아닌 몇 년 혹은 수회 계속해서 지원

받아 회사의 비용발생을 대체하려 하는 기업들이 존재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런 유형의 부실기업을 통칭하여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좀비기업의 정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것처럼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의 정의 기준 역시 단정적으로 제시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이것은 정부지원사업의 중단이 실질적인 퇴출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해당 기업들이 다른 형태로의 존속방법을 모색하여 생존해 나갈 가능성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유망한 기술력의 중소중견기업이 실제 기술개발과 시장개척을 위해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의 판단 기준을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의 판단 기준을 선별을 위한 구분기준의 개념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정부지원사업에 의존하는 부실기업군들이 위치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찾기 위한 검색의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나. 정부지원사업 현황과 실태

(1) 정부지원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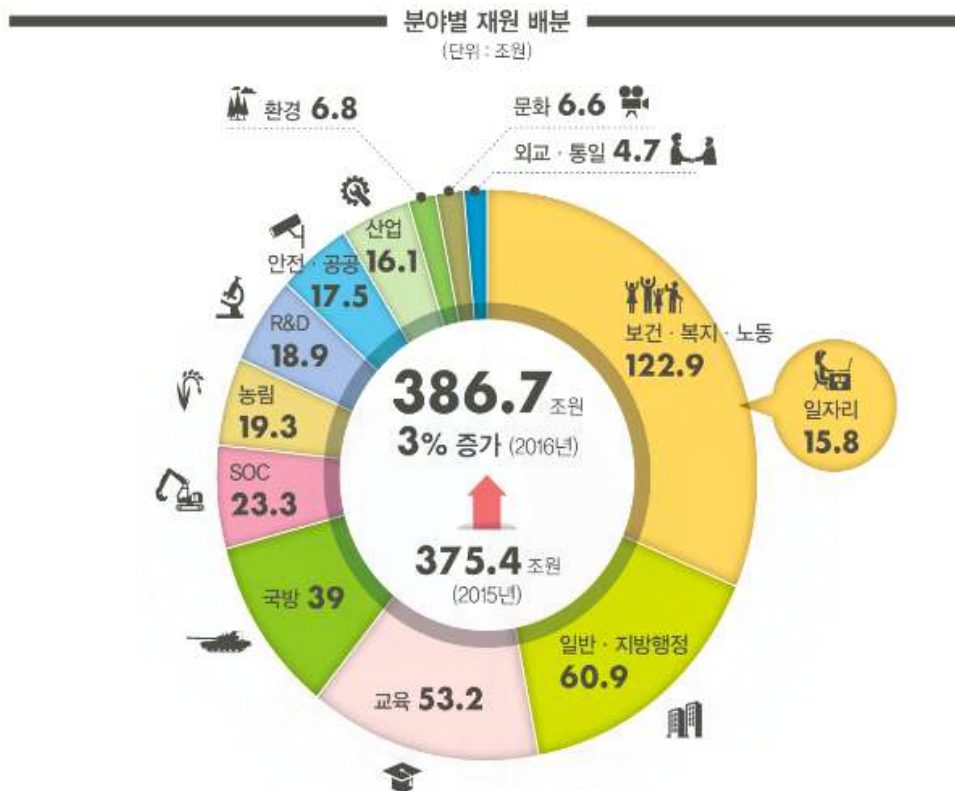


그림 9. 2016년 분야별 예산

출처: 기획재정부

2016년 정부예산은 총386.7조원이며 이중 연구개발과 관련된 예산은 총 18.9조원이다.

표 2. 연도별 R&D 예산내역(본예산기준, 단위 : 조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예산안)
R&D 총액	16.9	17.7	18.9	18.9
주요 R&D	11.4	12.0	12.9	12.6

출처: 미래부

현 정부에서 매년 4.7%, 6.8% 증가하던 R&D 예산이 2016년 예산안에선 0.2%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2016년 주요 R&D 예산안 규모는 12.6조원으로 2015년 12.9조원보다 2.3%(0.3조원) 축소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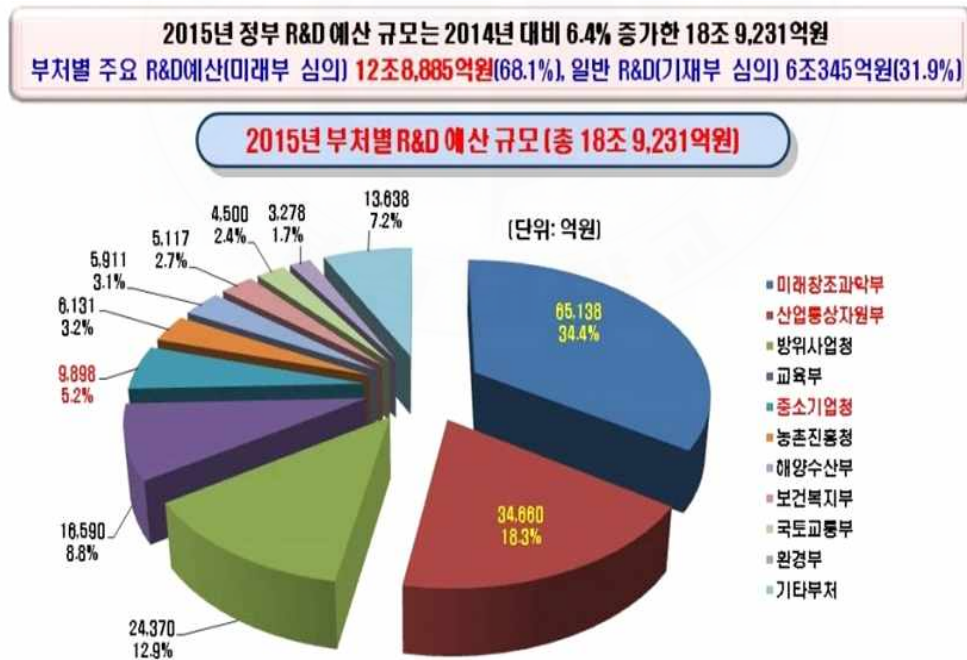


그림 10. 2015년 R&D 예산내역(본예산기준)

표 3. 연도별 R&D 지원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3년간 연구비 합계 (비율%)
	정부연구비			
국공립연구소	8	6	7	21(0.02)
출연연구소	14,951	16,405	5,506	36,862(29.84)
대학	4,619	4,398	3,048	12,065(9.77)
대기업(공기업포함)	7,984	7,840	4,844	20,668(16.73)
중소기업	11,509	12,540	10,099	34,148(27.64)
정부부처	19	32	24	75(0.06)
기타	6,071	5,898	4,806	16,775(13.58)
중견기업	-	-	2,912	2,912(2.36)
총합계	45,161	47,119	31,246	123,525(100.0)

출처 :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

2013년 기준 중소기업 지원금액 비중이 전체 정부연구비 지원금액의 32.3%를 차지한다.

표 4. 정부의 R&D 지원 현황('10년 ~ '13년)

구분	사업 수 (개, %)		예산 (백만 원, %)		과제 수 (건수, %)		참여기업 수 (개, %)	
산업통상자원부	146	38.0	3,308,501	49.5	10,818	30.1	19,377	40.6
미래창조과학부	35	9.1	274,181	4.1	759	2.1	1,588	3.3
방위사업청	15	3.9	284,715	4.3	472	1.3	545	1.1
국토교통부	35	9.1	307,914	4.6	1,046	2.9	1,776	3.7
환경부	10	2.6	168,508	2.5	462	1.3	466	1.0
농림축산식품부	24	6.3	100,980	1.5	1,159	3.2	1,195	2.5
농촌진흥청	31	8.1	52,856	0.8	783	2.2	819	1.7
보건복지부	11	2.9	69,117	1.0	474	1.3	532	1.1
문화체육관광부	21	5.5	81,968	1.2	286	0.8	481	1.0
해양수산부	10	2.6	22,693	0.3	174	0.5	197	0.4
산업청	4	1.0	1,364	0.0	94	0.3	109	0.2
중소기업청	42	10.9	2,014,049	30.1	19,453	54.1	20,617	43.2
전체	384	100.0	6,686,846	100.0	35,980	100.0	47,702	100.0

출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김선우외 2014)

총 12개 부처로 산업부·미래부 등 KOSBIR 해당부처 11개와 중소기업청이다. 정부 중소기업 R&D 지원 규모('12년 기준, 2조 4,474억 원)의 83.5%(2조 430억 원)를 중소기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및 미래창조과학부(구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하고 있다.

표 5. 정부의 R&D 지원 현황

구분	기업당 지원금 (백만 원)	평균 매출액 (백만 원)	평균 종사자 수 (명)	평균 업력 (년)	기업부설 연구소 비중(%)	혁신형 기업 비중 (%)	제조업 비중 (%)	수도권 비중 (%)
산업통상자원부	217	22,109	69	14	62.5	53.9	77.8	42.8
미래창조과학부	237	17,876	88	13	85.0	70.4	34.6	75.5
방위사업청	522	44,956	135	16	74.4	63.2	81.3	52.1
국토교통부	175	16,273	65	14	84.5	60.1	38.4	77.1
환경부	362	11,630	39	13	76.0	68.2	64.3	72.3
농림축산식품부	85	11,402	50	14	62.4	54.1	69.5	54.4
농촌진흥청	65	9,176	46	13	54.3	40.9	50.7	64.2
보건복지부	130	12,249	69	15	89.1	72.6	68.1	72.3
문화체육관광부	180	5,696	45	11	58.7	54.1	19.8	83.4
해양수산부	128	9,018	50	13	76.6	66.0	53.5	48.5
산림청	41	11,358	42	14	45.9	40.4	65.6	45.0
중소기업청	108	9,840	37	11	61.9	66.7	75.3	47.0
전체	163	16,223	56	13	64.2	60.5	71.7	48.5

출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김선우외 2014)

기업당 지원금은 방사청(522백만원)이 가장 크며, 환경부, 미래부, 산업부 등의 순이며 지원업체의 규모는 매출액으로는 방사청(44,956백만원)이 가장 크며, 산업부, 미래부, 국토부 등의 순이다.

종업원 수도도 방사청(135명)이 가장 크며, 미래부, 산업부, 보건부 등의 순이다.

지원업체의 평균업력은 11~16년으로, 모든 부처에서 1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혁신형 기업을 중심으로 많이 지원하는 부처는 보건부(72.6%)이며, 미래부, 환경부 등에서 혁신형 기업의 지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을 지원하는 비중은 방사청(81.3%)이 가장 크며,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수도권 소재 기업을 많이 지원하는 부처는 문화부(83.4%)이며, 국토부, 미래부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을 주관으로 하여 지원하는 부처는 농림부와 농진청이 100.0%로 가장 많으며, 국토부, 환경부, 방사청 등이 90% 이상의 과제를 중소기업 주관의 형태로 지원 중소기업 주관 과제비중은 중소기업청(63.3%) < 부처 평균(69.3%) < 산업부(71.0%) 순으로 산업부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였다.

이는 중소기업청은 지원대상(중소기업)에 초점 vs 산업부는 지원과제(기술확보)에 초점이라는 사전적 이해와 다른 결과이다.

탑다운과제(지정과제) 형태로 지원하는 부처로는 방사청과 농진청이 100.0%로 가장 크며, 국토부, 미래부 순이며 개발연구 단계의 과제를 많이 지원하는 규모는 중소기업청(99.7%)이며, 문화부, 산업부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기술수명주기 상 도입 혹은 성장기 기술에 지원하는 부처는 중소기업청(98.4%)이 가장 크며, 농림부, 환경부 등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연구기간은 평균 1~3년이 일반적이며, 부처에 따라 최대 22년 사업도 있으며 과제기간은 중소기업청(1.4년) < 부처 평균(2년) < 산업부(3.1년)으로 중소기업청 과제가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정부지원사업 실태

국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제도적□구조적□운영적 측면에서 지원법체계, 정책의 전달체계, 그리고 예산의 집행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지원법체계

우선 현행 중소기업 지원관련 법규는 헌법 제123조 제3항과 제5항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 육성”을 근거로 중소기업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심으로 9개의 절차법과 2개의 특별법, 그리고 22개의 시행령과 세부 시행규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지원기관들은 이러한 법체계에 의거하여 자금, 보증□보험, 기술개발, 특허□인증, 판로□수출, 인력, 창업□벤처, 정보화□컨설팅, 자영업유통, 그리고 대중소 상생협력 등 다양한 부문에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지원관련 법체계의 복잡□다기화로 인해 유관기관들의 지원내용이 유사 중복일 개연성이 다분한데 그 이유는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은행법’을 제외한 그 외의 법률은 모두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자금지원의 경우, 다수의 유관기관들은 4개의 절차법과 2개의 특별법에 따라 공제사업기금, 사업자금, 투자출연 보조융자, 기금의 투자, 우선적 신용보증, 금융 및 세제지원, 창업 및 진흥기금, 그리고 기술협력 촉진자금 형태로 이름을 달리 하고 있으나 다소 중복적인 성격을 띠고 있

는데 이러한 현상은 모든 지원영역에서 상대적인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관련하여 지역 중소기업 유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 중 45.5%가 자금지원이 가장 중복성이 심각한 것으로 응답하였다.(출처, 신동호, 산업인력관리공단 산업입지 2014 vol.53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인용)

또한 이러한 지원사업의 중복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70.8%가 기관별 역할 및 기능을 명확히 하는 관련 지원 법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지원부문에서 유사법령이 다수 혼재한 경우 이를 통합 재 정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출처, 신동호, 2014)

(나) 정책전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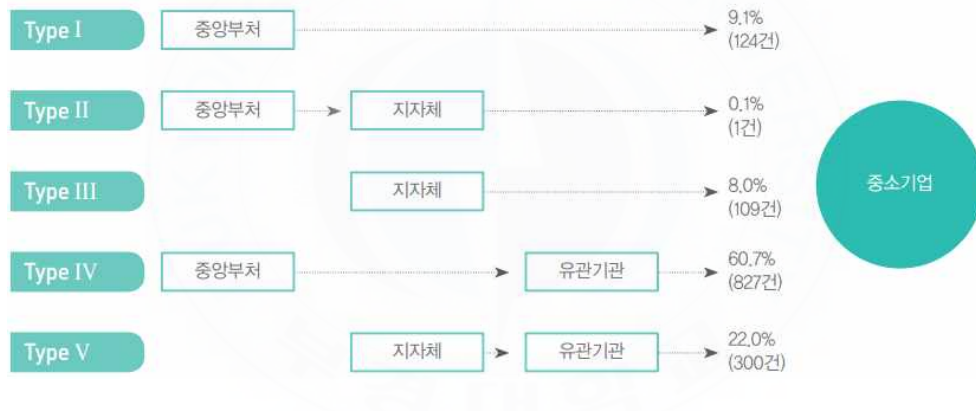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전달체계(delivery system)는 지원사업이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을 거쳐 최종수요자인 중소기업에 전달되는 과정을 일컫는 것으로 국내 중소기업 정책의 전달체계는 총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들 유형 중에서 유관기관을 거쳐 중소기업에 전달되는 Type IV와 TypeV가 총 지원사업의 82.7%(1,127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주된 수행은 유관기관이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 인식을 토대로 정책전달체계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중앙부처의 기획조정 및 관리측면, 유관기관 간의 연계협력측면, 그리고 정책수요자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부처 간 기획 조정 측면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 및 전달체계의 유형화

구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합계	
	건	십억원	건	십억원	건	십억원	건	십억원
융자투자	70	7,041	37	3,394	62	3,530	169	13,965
보증보험	7	11	26	3	7	5	40	19
기술	282	1,397	80	8	61	3	423	1,407
특허인증	36	3	24	3	10	-	70	6
판로수출	128	710	54	29	115	102	297	841
인력	113	52	20	0.6	23	0.3	156	52
창업벤처	39	20	9	886	24	641	72	1,546
정보화컨설팅	45	54	15	0.7	13	0.3	73	54
자영업유통	42	372	7	469	5	190	54	1,031
대중소상생	3	54	2	-	2	50	7	104
합계	765	9,713	274	4,792	322	4,521	1,361	19,027



출처 : 중소기업청 통합정보시스템(www.spi.go.kr)

정책전달체계의 문제점은 부처에서 개발□시행중인 개별사업에 대한 조정 및 총괄기능 자체가 부재한 탓에 발생하게 된다.

실례로 판로지원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청, 그리고 지자체에서 각각 지역기업 전시회지원사업, 지역향토기업 박람회 지원사업, 중소기업 전문전시회 지원사업, 지역산업 전시박람회 지원사업을 개발□시행하고 있는데 정책개발단계에서 조직 특유의 칸막이 행정으로 인

해 부처간 기획 조정 및 총괄기능이 부재하여 지원대상과 목적이 유사한 사업이 중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원대상과 목적이 유사한 사업의 경우에는 정책개발 단계에서 부터 이들 사업을 판로지원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부합하도록 사전에 기획 조정하여 그 효과성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 측면에서 본 정책전달체계의 문제점은 정책수행 단계에서 상호연계 및 정보공유가 미흡하여 효과적인 사업수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유사 중복적일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실례로 창업지원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및 보육지원을 통해 유망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시행되는 사업으로 그 지원기관으로는 테크노파크(TP)와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원기관은 각각 창업보육센터운영, 창업기업 지원사업, 그리고 창업보육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동 기관들은 중소기업청 또는 지자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판로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 간 원활한 상호연계나 정보공유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정책 수행단계에서 유관기관간 기능 및 역할이 중첩 또는 모호한 경우, 이를 명확하게 재설정함과 동시에 상호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차원에서 업무와 정보공유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책수요자인 중소기업 측면에서 본 정책전달체계의 문제점은 동일한 지원 분야에 다수의 유관기관이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탓에 지원 창구의 분산으로 인해 이용 상의 혼란이 유발되거나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나아가 일부기업의 중복수혜로 인해 발생하는 재원의 낭비와 함께, 낭비된 그 재원만큼 다른 기업이 정책수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부작용도 야기된다.

실례로 자금의 경우, 자치단체와 다수의 유관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지원센터,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 등)이 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앞서 기술한 지원창구 분산 및 중복수혜 문제점이 고스란히 노출된다.

따라서 수요자의 혼란을 줄이고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지원창구의 단일화작업이 요구된다.(출처, 신동호,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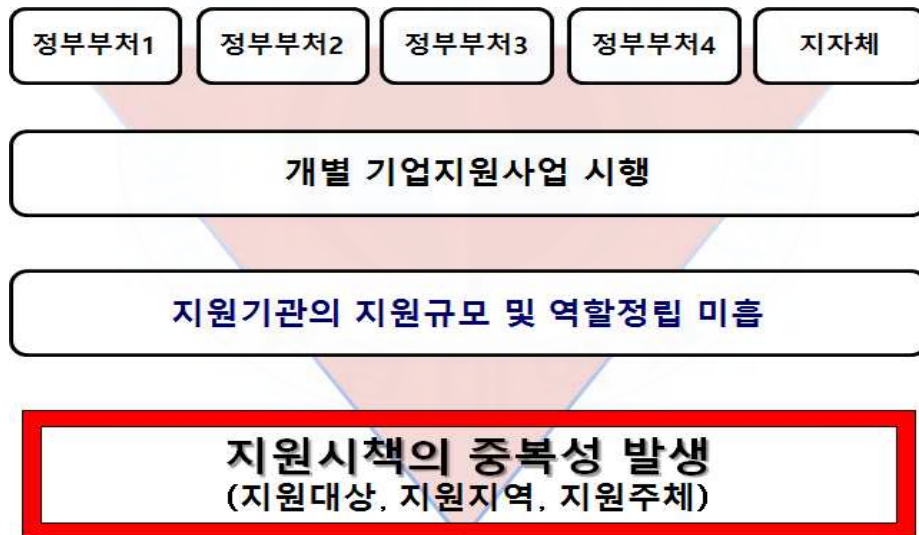


그림 11. 정부지원시책 중복성 발생

위의 그림과 같이 지원시책의 중복성 발생으로 인해 지원체계의 문제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사업에

대한 개별 기업의 신청 가능 여부와 지원시의 중복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참여여부를 판단하게 되지만, 기업의 기술개발 관련 인력들은 정부 지원사업의 공고가 나오면 사업 선정을 위해 이들 검토과정을 우회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중복성을 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변경되어 작성된 과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중복성의 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기술개발 외 기술지원, 마케팅 등 일반적 기업지원의 경우 중복성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더욱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각 부처별로 지원사업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각종 지원책의 교차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복지원에 대한 제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또한 많은 개별관리기관이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기관의 역할과 범위 등에서 여러 가지 관리의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과거 이러한 정책의 중복지원 문제를 이용하여 정부사업 및 지자체사업을 넘나들며 지원금으로 기업의 존속을 보전하는 형태의 부실기업들이 또 다른 좀비기업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2. 연구방법 및 분석내용

가. 분석자료

본 논문에서는 2013년부터 2014년에 걸쳐 조사지역 권역 내에서 정부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여기에는 총 973개의 지원 기업(2013년 313개, 2014년 660개)이 포함되었으며, 지원 대상기업들의 지원 사항에 대한 내역을 기초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전국적인 범위에서 지역사업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작성시 좀 더 다양한 분석결과를 도출 할 수 있겠으나 대부분 관련 지원사업들의 프로그램 구성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 틀을 추후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지역별로 중소중견기업들의 산업별 구성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의미있는 결과의 도출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 범위의 확대를 지양하였다.

본 논문에서 분석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었다는 한계가 있는데, 이것은 2015년 이후 사업의 지원내역에 대한 집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2013년 이전 지원내역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실질적인 취합이 기관별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취지가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의 단정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실기업군의 존재가능성이 높은 영역의 발견을 위한 간접 지표의 모색에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 분석기간으로 인한 본 연구의 한계가 해당 지표의 발견을 위한 접근법의 유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기업의 내용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연단위로 구분하여 전체기업의 수는 중복기업이 존재하며, 이러한 중복기업의 발견이 본

연구에서는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겠다.

자료 조사분석시 신생기업 및 기업매출액 미확인 기업은 지원금액 및 관련 비중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신생기업의 경우 매출 발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매출액 미확인 기업의 반영시 분석결과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중을 산출하는 기준에서 685개 기업만 대상으로 하였다.



나. 분석방법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사업지원신청을 통해 정부지원사업에 선정 및 지원 완료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정부지원사업의 연간 지원총액을 해당년도 기업매출액과 비교하여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액 비중 및 지원건수를 추정하였다.

두 번째는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정부지원사업의 연간 지원 사업 프로그램에 따른 다수지원(2건 이상 및 중복 지원) 여부와 2년 연속 지원 기업수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세 번째는 조사대상 사업 중 1개 분야 사업을 기준으로 해당사업의 지원 기업 중 사업 종료 후 폐업기업에 대한 자료를 추적 조사하였다.

네 번째는 기업규모와 고용인원 그리고 영세기업(매출 10억 이하 또는 10인하 기업)여부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여, 이들 기업과 앞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서 조사된 기업과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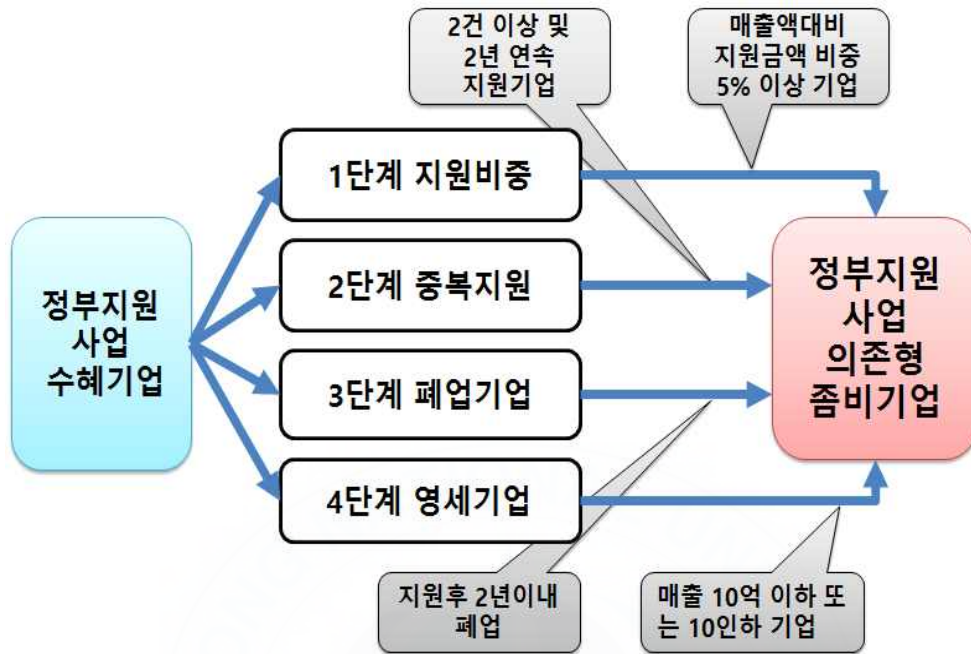


그림 12. 분석과정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좀비기업의 측정방법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의 대상범위를 추정하는 방법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원절차에 따른 조사내용을 기초로 개별 데이터를 비교분석하는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다. 분석내용

지원대상기업의 연도별 매출규모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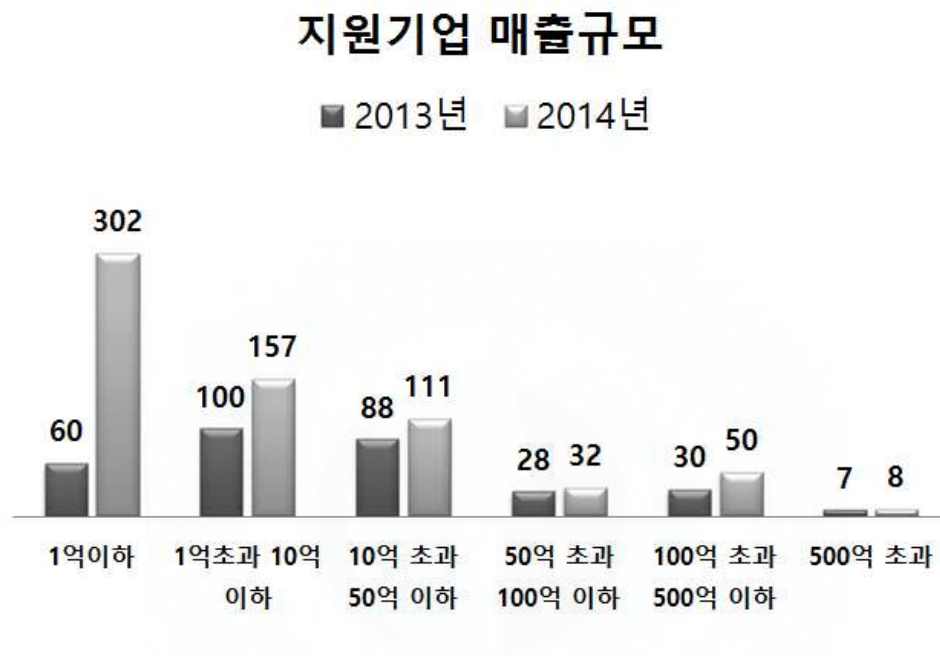


그림 13. 2013년 대비 2014년 지원기업 매출규모

조사기업의 지원매출 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의 경우 지원기업 중 51%가 매출규모 10억 미만의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2014년에는 그 값이 약 18% 증가하여, 69%가 매출규모 10억 미만의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즉, 지원기업대상의 매출규모가 2013년 대비 2014년에 10억 이하의 영세기업으로 그 수가 급속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기업이 비중이 10억 이하의 영세기업에 대한 증가로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지원기업의 지원규모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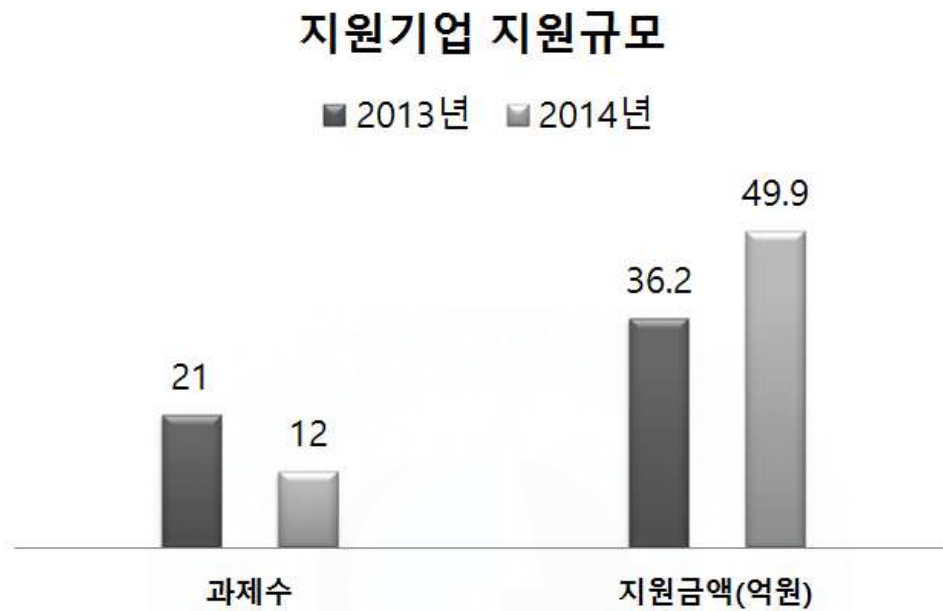


그림 14. 2013년 대비 2014년 지원기업 지원규모

정부지원사업의 지원 과제수는 감소하였으나 2013년 대비 2014년의 지원 금액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정부시책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연간 R&D 예산의 증가로 기업지원의 규모도 함께 커지고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이 매출규모에 따른 지원액의 비중을 살펴보면 매출액 10억 이하의 영세기업이 전체 기업지원액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영세기업일수록 정부지원사업의 의존도가 높음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표 7. 매출규모 대비 지원규모 비중

(단위:백만 원)

구분		2013년	2014년
기업매출규모	1억 이하	581	911
	1억 초과 10억 이하	1,252	1,864
	소계	1,833	2,775
전체지원액		3,625	4,995
지원액 비율		50.5%	55.5%

표 8. 지원기업의 고용인원 비중

구분		2013년	2014년
고용인원	10인 이하	171	485
	전체	313	660
전체 대비 비중		54.6%	73.4%

고용인원 비중은 10인하 소규모 기업이 2013년 대비 19%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과 같이 기업의 고용인력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지원기업의 영세성은 점점 증가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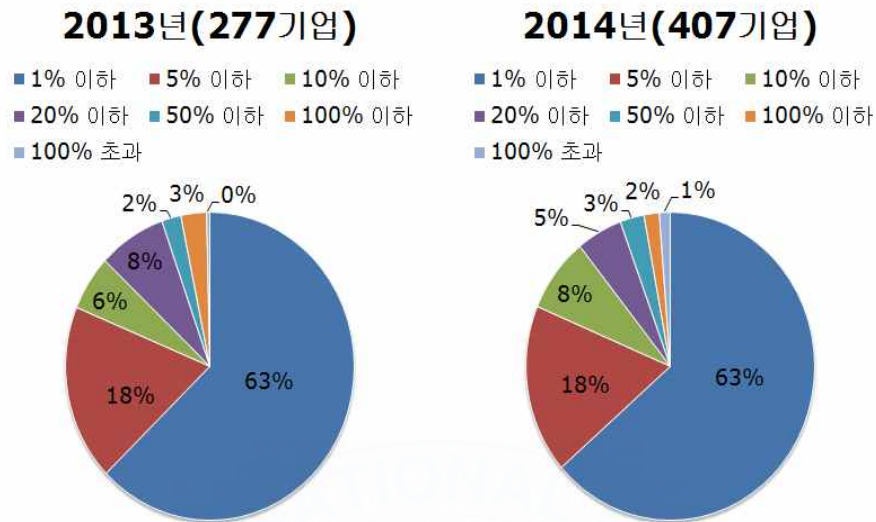


그림 15. 기업 매출액 대비 정부지원사업 지원액 비중

2013년 기준 277개의 조사기업 중 기업지원액이 기업매출액 대비 1% 이하가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5%이하를 포함하면 전체 81%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기업이 정부지원사업에 의존하지 않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정부지원사업이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투자비중을 정부지원사업비와 연계하여 살펴보는 것은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중소기업의 식별에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실제로 2014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비중이 4.29%로 나타났는데, 특정 기업의 정부지원사업 금액이 대부분 연구개발에 투자된다고 가정할 때, 그 비중이 4.29%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면 해당 기업의 연구개발이 자체 비용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적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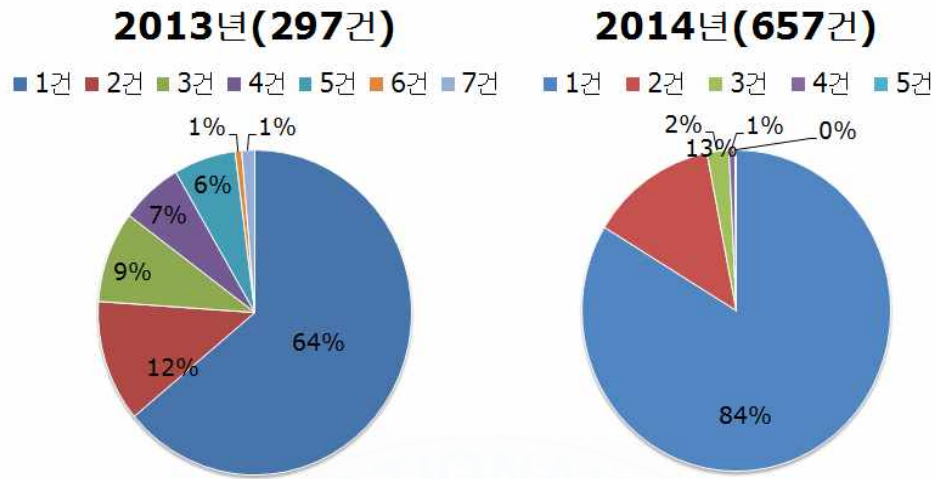


그림 16. 한국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적으로도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건설한 기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의 비중을 자체적으로 꾸준히 높여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사업 금액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연구개발비의 평균 비중인 4.29%를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비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비중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신생 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과 관련된 공식적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연구개발비 비중을 추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출액 대비 자체 연구개발비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비중을 비교하는 대신, 매출액 대비 정부사업지원금의 비중만을 지표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의 발견 가능성이 높은 범위의 검토기준으로, 매출액 대비 지원금액의 비중이 5% 이상인 기업(전체 자료에서 19%를 차지)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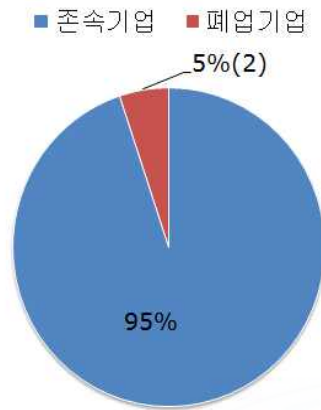
2년 연속 지원기업 수 : 143개 기업(연 2건 이상 37개 기업)

그림 17. 연도별 기업당 중복지원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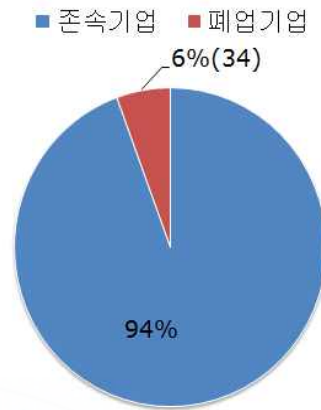
지원금액이 매출액의 5%를 넘는 기업 중에서도 중복건수가 많은 기업일 수록 더욱 정부지원사업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기업 중에서 3건 이상의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을 추가적인 좀비기업의 탐색 기준으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기업들의 좀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후 폐업된 기업의 발생 사례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검토하였다.

지원기업 중 폐업기업은 전체 지원사업 중 1개 분야 사업의 지원기업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분석하였으며 폐업기업에 대한 지원금액을 확인하였다.

A분야 지원사업(39기업)



A분야 지원규모(607백만원)



**2013년 조사대상 지원사업 중 1개분야 39개 기업 중 2개 폐업
총 7건 지원**

그림 18. 지원 후 폐업기업

실제로 지원 후 폐업기업의 지원금액 규모는 매출액 대비 5%이상을 차지하고 연도별 지원건수도 3건을 넘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거나 본 연구에서 좀비기업의 발견 가능 영역의 참조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는 지표가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같 이 좀비기업을 추정하기위해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경우에 대한 공통적인 부분을 찾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라. 분석결과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을 추측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의 경우 아래와 같은 범위에 존재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매출규모와 고용인원이 적은 영세기업 및 매출액대비 지원액 비중이 5% 이상인 기업, 연도별 중복지원 건수 3건 이상 지원받은 기업 중에 분포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물론 실제의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수치는 다년간의 추가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상정한 기준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부산 권역의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은 매출액 비중 기준 전체기업의 19% 범위 내에서 중복지원건수 기준 3건 이상을 보이는 기업들 중에서 높은 가능성으로 발견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물론 지역별 산업특징과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의 검토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조사 분석이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19.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 분포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 추정기업의 특징을 별도로 가정하여 그에 대한 결과로 좀비기업을 추정해보니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첫 번째 2013년 기준 추정기업의 기업별 매출액 규모는 기업당 5억 미만이며 2014년도 마찬가지로 5억 미만 기업들로 분포되어 있다.

정부지원사업 의존형의 경우는 일반적인 부실기업보다는 지원기업 규모에 따른 기업 영세성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연도별 좀비추정기업 매출액 규모(단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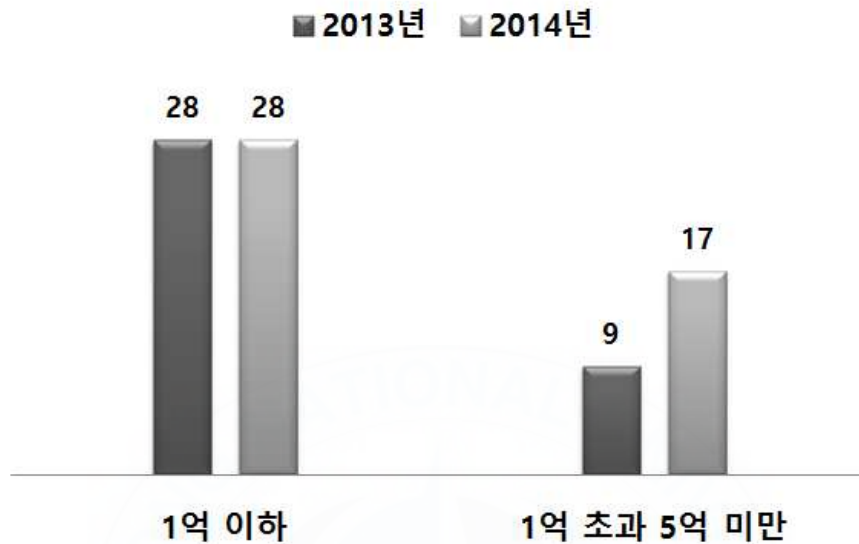


그림 20. 연도별 좀비추정기업 매출액 규모

두 번째 연속적인 좀비기업으로 추정되는 지원기업의 매출액규모 변화를 보면 대부분이 1억 미만기업이었으나 차년도에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좀비추정기업도 정부지원책을 효과적으로 활용시 좀비기업의 발견 영역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물론 이들 기업이 원래부터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이었는지 건설한 연구중심의 중소중견기업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좀비기업의 발견 영역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건전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려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연속 좀비추정기업 연도별 매출규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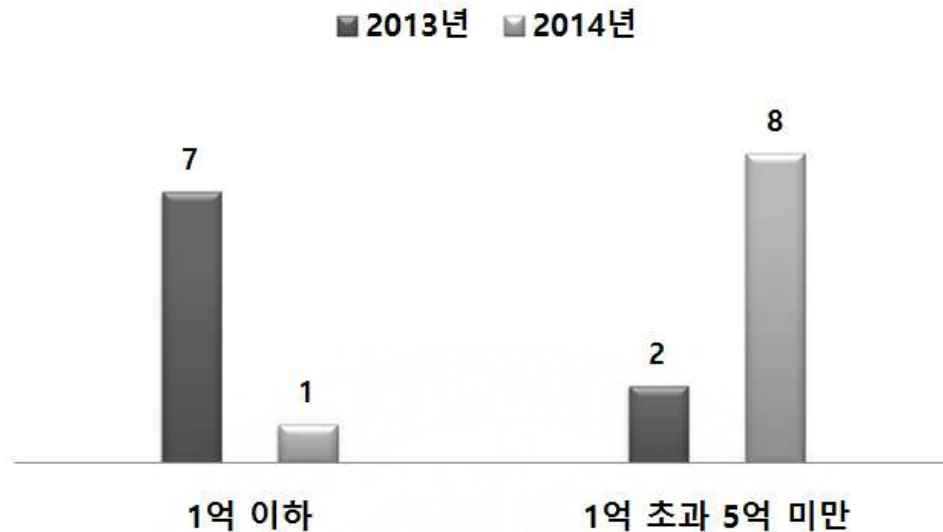


그림 21. 연속 좀비추정기업 연도별 매출 규모 비교

이는 대상영역에 존재하는 좀비기업이 지원책을 통해 좀비기업의 상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려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비교기업 중 2013년 대비 2014년 매출이 감소한 기업은 없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고 건전하게 발전하고자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웹상에서 정부지원사업을 키워드로 한 많은 인터넷 카페가 존재하고 있으며,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의 수는 실제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수가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인터넷 카페는 어떻게 하면 정부지원사업을 획득하고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와 컨설팅에 대한 내용이 다양하게 공유되고 있었다.

일반적인 웹사이트는 훨씬 더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지원방법이나 대응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소기업의 성장에 대한 요구를 적절히 지원하여 좀비기업화 하는 것을 막고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끌어내는 제도적 장치와 정책적 방향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좀비기업 발생 영역에 안주하지 않고, 이들 기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좀비기업 발생 영역을 식별하고, 지원금이 이들 영역내의 기업에 무분별하게 투입되는 것을 막아서 정부지원정책자금의 효율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들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

첫째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의 존재를 인지하는 새로운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관리시스템은 좀비기업 선별을 위한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진다.

진정한 자금지원의 효율성 강화는 좀비기업을 식별하여 낭비되는 예산을 건강한 기업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위한 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여러 가지 기업지원사업의 효과성 및 자금의 활용성에 대한 자료와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은 많으나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주체가 되는 개별 기업을 분리하여 식별 할 수 있는 통합된 자료와 데이터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관리의 주체가 변경되고 시스템이 노후화되어 정보의 홍수에 대응하지 못해 자료의 정확도와 필요성이 저하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관리 통합관리시스템이 있으나 여기에는 보완과 개선이 여지가 많다고 판단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현황 및 문제점은 현재 통합관리시스템에 구축된 자료와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간의 대응되는

사업이 17개 수준으로 전체 사업 규모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2013년 기준 DB 구축 현황은 38개 사업(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규모는 사업 수로는 161개)으로 되어있으며 전체사업의 25%도 되지 않는다.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의 선별을 위해 장기간의 걸친 DB구축 및 사업신청 내용의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는 통합신청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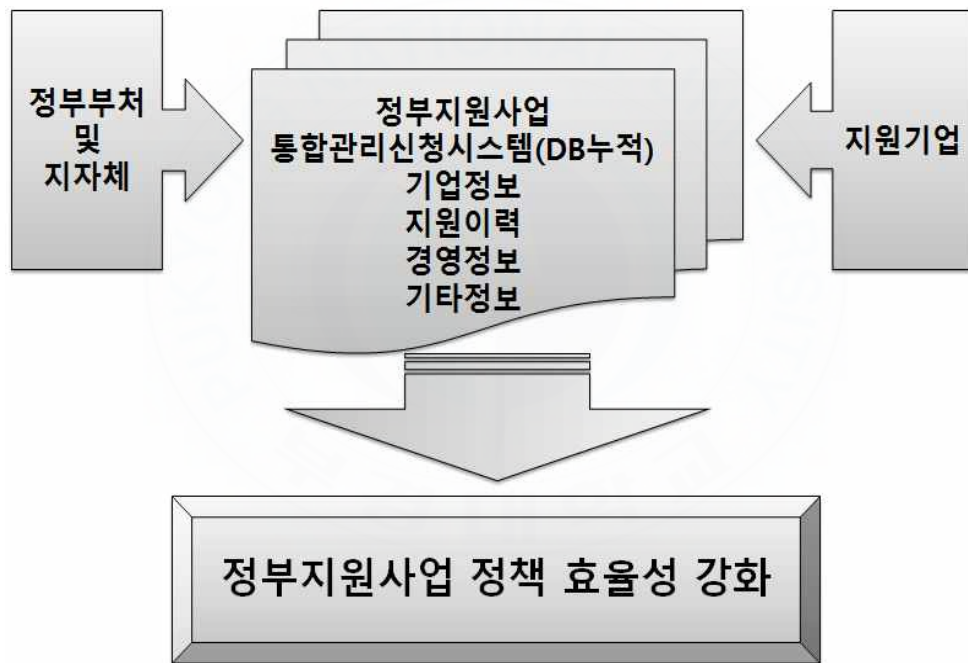


그림 22. 통합관리 신청시스템 체계도

통합관리 신청시스템을 통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의 모든 사업을 등록한 후 프로그램별 과제별 신청접수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사업신청기업이 시스템 접속 후에 기업의 공인인증서를 기초로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기업

의 기본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기본정보를 DB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의 추정 및 선별을 보다 정교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과제지원 정보와 기업 기본정보를 축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과제 지원건수, 지원기간 및 지원금 등을 해당 기업의 경영지표들과 함께 통합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충분한 정보의 축적과 함께, 산업현황과 정부시책에 맞는 제한기준을 분석을 통해 마련하고, 신청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모니터링 함으로써 좀비기업의 식별과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소기업의 성장 및 기술발전, 그리고 혁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기업 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특정 중소기업에 지원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의 혜택을 누리게 할 뿐 아니라 지원사업의 수행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범정부 차원으로 협력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사업부처나 사업담당자의 전문성이 사업성패에 미치는 영향력과 중복지원의 가능성을 줄이고 효율적인 정부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지원업체 DB 공동 활용의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유사, 중복성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한다.

기본적으로 유사 중복성은 지원기업의 문제도 있지만 지원사업의 유사성도 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각 부처 간에 협의를 통해 유사사업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

필요하다면 관련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한 정책개편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기업이 정부지원을 통해 좀비기업화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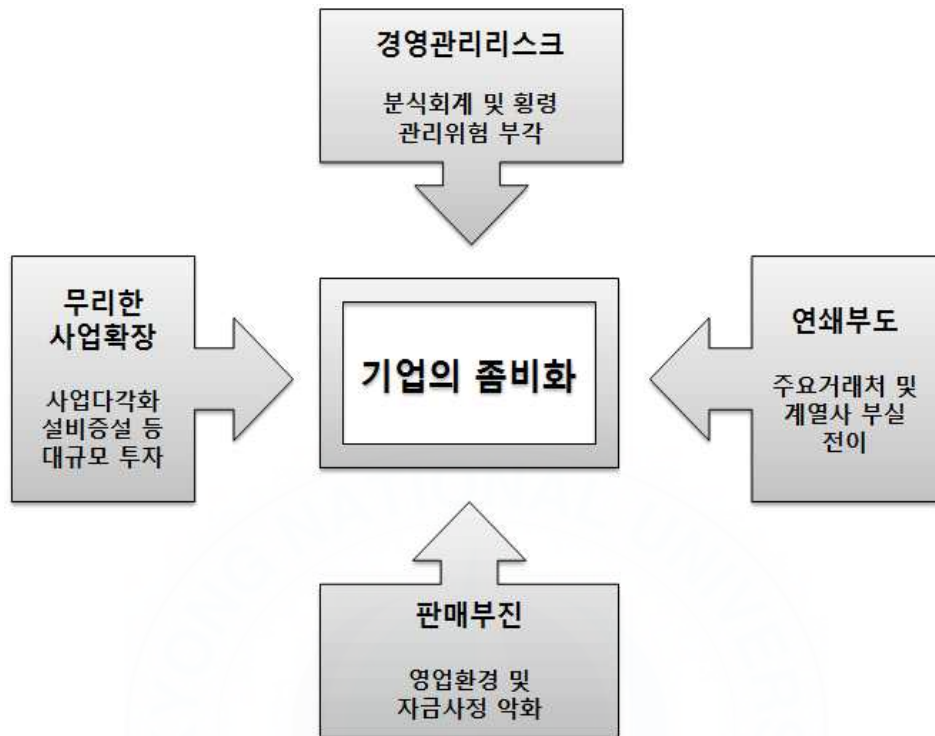


그림 23. 기업 좀비화의 원인

이를 위해서는 왜 기업들이 좀비화 되어지에 대한 이유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한다.

신용평가회사인 한국기업평가는 2005년부터 10년간 부도를 냈거나 기업 회생절차, 워크아웃을 신청했던 73개 기업 사례를 분석해 부실발생 원인별 유형을 분류하고 부실 징후와 특징을 도출한 바 있다.

그 결과 기업 부실의 원인이 크게 경영관리 리스크, 무리한 사업확장, 연쇄부도, 판매부진 등 4가지 유형으로 제시되었다.

- 경영관리 리스크

조직이 안정되지 못하고 경영진이나 대주주에 대한 의존도가 큰 중소기업에서 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전체 분석대상 73개사 중 11개사가 이 유형에 해당했는데 모두 중소기업이었다.

경영권이 바뀌고 분식회계나 횡령 등 관리 위험이 부각되면서 실적 부진 → 신규사업 투자 확대 → 자금 부족 → 부실로 이어지는 양상이일반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사이클을 몇 년간 반복하는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 부실기업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발표된 바에 따르면, 최초 경영권 변동부터 부실 발생까지 평균 5년이 걸렸다.

- 무리한 사업확장

사업다각화나 설비 증설 등의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원을 외부차입에 의존했지만 투자성과가 부진해 부실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전체 분석대상 중 15개사가 이 유형으로 분류됐는데 중소기업이 10개로 대기업보다 두배 정도 많은 양상을 보였다.

이런 유형의 경우에는 투자가 대규모로 이뤄졌다가 실적이 나빠지면 회사에 치명적 타격을 주기 때문에 부실 발생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3년 내외로 비교적 짧게 나타났다.

- 연쇄 부도

주요 거래처나 계열사의 부실이 전이되는 유형이다.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많이 나타났다. 금호, STX,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동반 부실화가 두드러졌던 2009년과 2013년에 주로 발생했다.

전체 분석대상 중 중소기업 4곳을 포함해 14개사가 이 유형에 해당됐는

데 부실 발생 과정이 매우 짧은 특징을 보였다.

- 판매부진

영업환경이 나빠져 제품 판매가 줄고 이로 인해 자금 사정이 악화돼 부실로 이어지는 양상으로 전통적인 부실의 경로를 밟는 유형이다.

전체 분석대상기업 73개사 중 33개가 여기에 해당돼 가장 많았고 상대적으로 대기업의 비중이 중소기업보다 높게 나타난다.

업종은 건설, 정보기술(IT), 제지, 조선, 해운 등 다양했지만 건설과 IT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러한 4가지 유형의 기업은 구조조정이나 퇴출로 좀비기업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 2006년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영세화는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들의 구조조정과 벤처 붐에 따른 다산다사형 창업과 소기업들의 투자 부진 및 성장 정체에 따른 좀비기업화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 1990년대 이후 중소 제조기업의 영세화가 급속히 진행

1990년대 이후 제조업 부문에서 영세소기업(종업원 5~9인) 사업체 수는 급속하게 증가한 반면에 중기업(종업원 50~299인) 사업체 수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제조업 부문의 영세소기업 사업체 수는 1990년 2만 1,652개사(총사업체 수의 31.4 %)에서 2004년에는 5만6,976개사(50.7 %)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표 9. 제조업 기업규모별 중소기업 비중 추이

(단위:%)

구분		사업체수			종업원수			부가가치		
		1990	1996	2004	1990	1996	2004	1990	1996	2004
중소제조기업		98.3	99.1	99.4	61.7	69.2	75.7	44.3	47.2	49.4
영세 소기업	5~9인	31.4	45.3	50.7	4.9	9.9	12.9	2.3	4.5	5.0
소기업	10~19인	29.2	27.1	25.3	9.0	12.2	13.7	4.7	6.2	6.7
	20~49인	24.8	18.3	16.3	17.4	18.5	19.8	10.6	11.2	11.5
중기업	50~299인	12.8	8.4	7.2	30.3	28.6	29.3	26.7	25.5	26.2
대기업	300인 이상	1.7	0.9	0.6	38.3	30.8	24.3	55.7	52.8	50.6

출처 : 통계청,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각년도

이에 비해서 중기업의 사업체 수는 1990년 8,820개사(총사업체 수의 12.8%)에서 2004년에는 8,038개사(7.2%)로 감소했음. 대기업의 사업체 수도 1990년 1,193개사(1.7%)에서 2004년에는 695개사(0.6%)로 크게 감소하였다.

제조업 종업원 수 및 부가가치 생산에 있어서도 영세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각각 4.9% 및 2.3 %에서 2004년에는 12.9% 및 5.0%로 빠르게 증가했다.

□ 일본과 미국의 경우에는 중소 제조기업의 영세화 현상 없었음

일본 및 미국의 제조업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소 제조기업의 영세화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에는 영세소기업(종업원 4~9인 사업체) 수가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일본 제조업의 경우에 총사업체 수에서 영세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54.6%에서 2003년 51.2%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종업원수 비중도 1990년 12.5%에서 2003년 10.7 %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제조업의 경우에도 <표 11>에서 보듯이 총사업체 수에서 종업원 500인 이상 대기업 비중이 1990년 18.1%에서 2003년 16.0%로 다소 감소해 갔지만, 제조업의 영세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겠다.

특히, 미국 제조업의 경우에는 종업원 수 5~9명의 영세소기업 비중(2003년 24.6%)보다도 종업원 수 20 ~ 99인 규모 중소기업의 비중이 27.8 %로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다.

□ 다산다사형 창업활동과 창업기업의 성장정체가 영세화의 주요 원인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영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다산다사(多産多死)형의 창업 활동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제조업 창업활동과 영세소기업 비중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급속한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정리해고 및 벤처 붐의 영향으로 다산다사형 창업생태계가 조성되어 무분별한 창업이 조장되었다.

장기간의 소비 침체로 인하여 내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 제조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했던 것도 중소기업의 영세화를 촉진한 원인이었다.

특히, 영세소기업이 새로운 투자나 사업의 확대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중기업으로의 성장이 정체되는 좀비(zombie)기업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 중소기업 영세화로 인해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양극화 심화됨

노동생산성 향상이 부진한 영세소기업 및 소기업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전체적인 노동생산성 향상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대·중소기업간 노동생산성 양극화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0~2004년 기간 중 영세소기업의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은 10.0 %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기업의 14.4%는 물론 중소기업 평균 10.8 %에 비해서도 저조한 수준이다.

제조업 총사업체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하게 높아진 영세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수준은 1990년 대기업 수준의 32.5%에서 2004년에는 18.6%까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표 10 참조)

한편, 영세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미국, 일본 제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의 상대적 격차가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우처럼 계속해서 확대되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10. 제조업 기업규모별 생산성 증가율

(단위 : %)

구 분		생산성비율(대기업=100.0)			1990~2004 연평균증가율
		1990	1996	2004	
중소기업(5~299인)		49.3	39.8	31.3	10.8
영세소기업	5~9인	32.5	26.6	18.6	10.0
소기업	10~19인	35.7	29.9	23.7	11.1
	20~49인	41.8	35.2	27.7	11.1
중기업	50~299인	60.5	51.5	43.0	11.6
대기업	300인 이상	100.0	100.0	100.0	14.4

출처 : 통계청,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각년도

표 11. 일본, 미국 중소기업의 생산성(대기업=100 기준) 추이

(단위 : %)

구분	일본제조업			구분	미국제조업	
	1991	1997	2003		1997	2002
중소기업 (4~299인)	49.5	49.0	49.4	중소기업 (5인~499인)	58.2	59.8

출처 : 일본 중소기업청, 미국 중소기업청.

일본 제조업의 경우에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49.4%(2003년 기준)에 달하며, 1990년 이후 대기업의 약 49% 수준에서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미국 제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1997년 대기업의 58.2%에서 2002년에는 59.8%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업원 5~9인 영세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1997년 대기업의 40.4%에서 2002년에는 대기업의 47.4%로 오히려 크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망 창업 영세소기업이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창업 초기 유망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컨설팅, 마케팅 지원을 연계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들의 발생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좀비기업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정부정책은 중소기업들이 가진 기술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들의 기술개발을 지원해야 하며, 기업들은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조기에 안정화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려면 앞에서 분석된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으로 추정되는 영역에 있는 기업이 해당 영역에 장기가 머무르면서 좀비화 되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 본 일반적인 좀비기업화와 같은 형태의 분류 기준으로 기업을 판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방식만으로는 정부지원사업에 의존하는 기업의 좀비화를 효과적으로 막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정형화된 기준이 만들어지고 그 기준에 따라 움직이고 익숙해지는 과정을 통해, 해당 기준에 안주하는 기업들이 좀비화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화를 막기 위해서는 고정된 선별 기준보다는 기업의 성장단계와 지원상황을 고려한 다른 형태의 새로운 개선 및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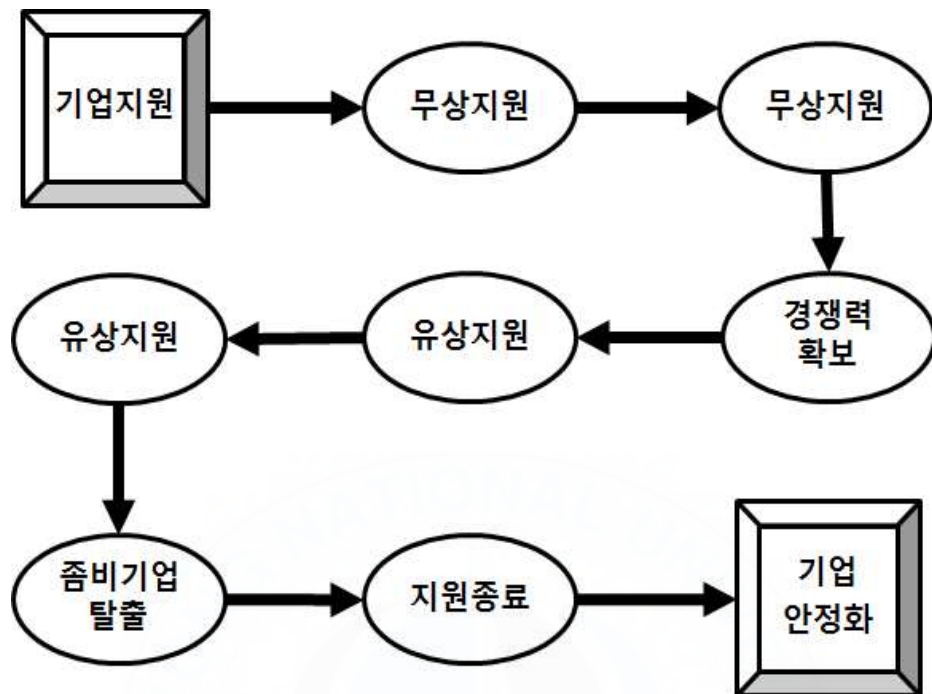


그림 24.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화 대응 체계

기업에 대한 지원 금액이나 지원횟수의 상한선을 기업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기업이 기본적으로 어느 선 이후로는 자생해야 되는 기준시점을 정해주고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계속적인 지원은 좀비화를 부추기고 그림으로 인해 신생기업과 기술잠재력이 있는 영세기업의 지원이 분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전체적인 지원단계와 규모의 상한선이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의 발생가능 영역을 고려하여 기업에 따라 설정될 수 있다면, 기업은 단순 지원책에 대한 반복적 의존이 아닌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지원사업 참여시 모든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기업이 분담하는 금

액의 비율 적정선을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목적이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무상지원부터 일정 비율까지 기업이 분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업분담은 기업이 해당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서의 의미도 가진다.

기업이 성장하는데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책임을 기업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위와 같은 경우 외에도 사례분석을 통한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기업의 준비화 원인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은 지원을 통한 기술 및 제품개발에 우선적인 노력을 집중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상당 수의 기업이 준비화될 위험에 노출된다. 그 다음 단계로는 개발된 제품을 판매하고 최종 수익을 창출하기까지의 과정이 이어지게 되고, 이 단계에서도 추가적으로 준비화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두 단계의 성격이 다른 만큼 각 단계에서 준비화되는 유형의 성격도 서로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각 단계별로 준비화되는 주된 원인을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기업은 목적은 이윤창출이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판매해야 하며,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판매할 수 있는 완제품이 존재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나열해보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과정은 다음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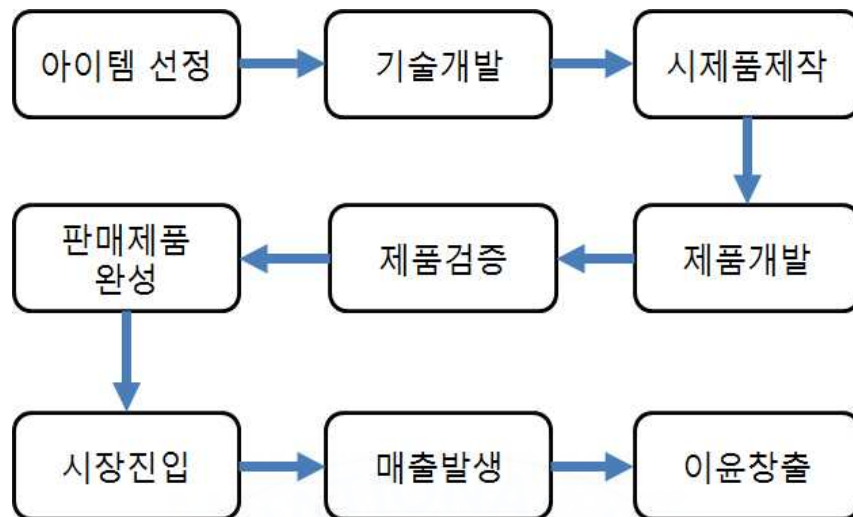


그림 25. 기업 이윤창출 프로세스

<그림 25>를 보면 가장 먼저 아이템이 필요하고 그런 아이템을 개발하여 제품화하고 그 제품의 판매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킨다.

위 그림은 기본적인 이윤창출 프로세스이다.

기존의 아이템으로는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산업은 트렌트가 있으며 제품은 수명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한 경제구조에서 장기적으로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림 25>의 프로세스가 아닌 다음의 <그림 26>와 같은 프로세스가 구성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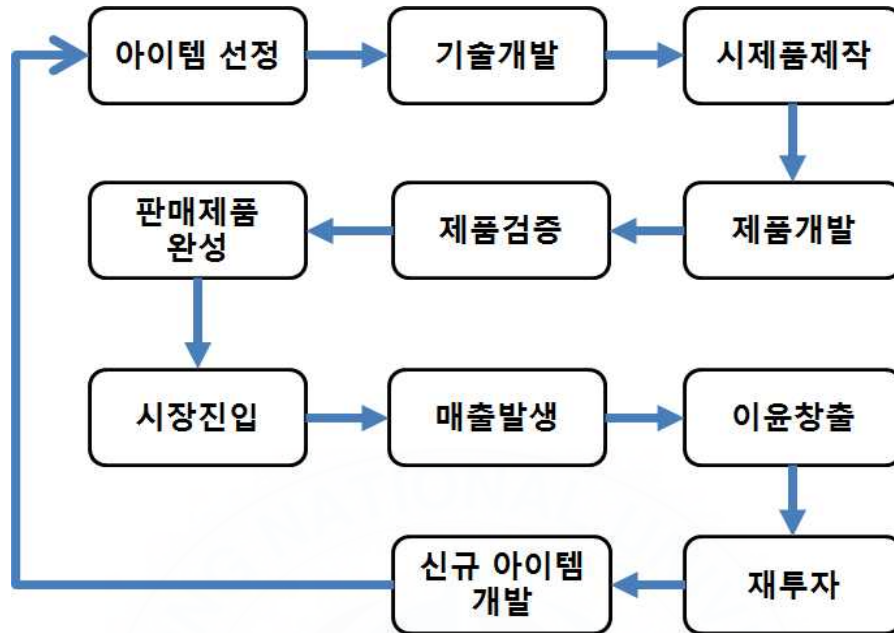


그림 26. 지속적 이윤창출 프로세스

<그림 26>와 같은 프로세스를 기업이 가지고 있어야만 창업기업이든 기존 기업이든 회사를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만 좀비화가 되지 않지만 일부 기업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과정 중간에 몇 가지 변수가 발생하여 좀비기업으로 진행되는 경우를 발견하기도 한다.

첫 번째 유형으로는 아이템을 선정하고 제품을 개발한 후, 그 제품을 활용한 상품만 제한적으로 제작하는 경우이다.

이는 기업이 개발한 소수의 제품만 믿고 새로운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지 않음으로써 제품 아이템의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시장 진입 안착 실패로 지속적으로 개발하지 않음으로써 제품

아이템의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이다.

제품판매를 위해 시장진입 시 고려할 사항이 너무나도 많다.

하지만 회사가 판매시점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회사에서 추구하는 정책대로만 추진하다가 제품 출시와 동시에 시장진입에 실패하는 문제점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 기업의 사례를 보았을 때 기업이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고 제품개발은 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시장진입이 실패하여 이윤창출을 하지 못함으로써, 자체적인 신제품 개발을 해내지 못하게 되어 오로지 정부지원사업을 통해서 제한적인 아이템의 제품만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게 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제품개발 지원보다는 아이템의 제한성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나 기업과 시장상황에 맞는 지원 방식을 추가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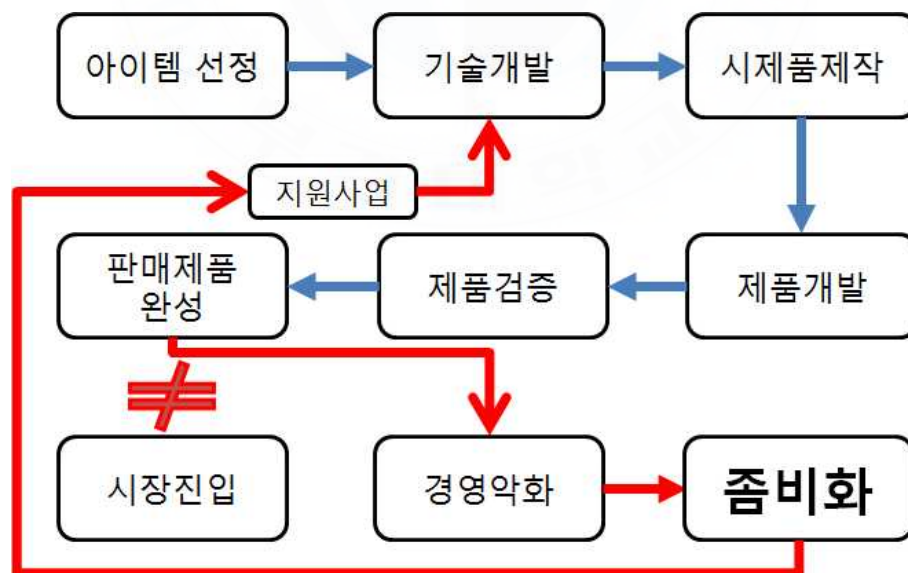


그림 27. 사례분석을 통한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준비기업화

마지막으로 정부지원시책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 공유와 컨설팅을 하는 곳이 아주 많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실제로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인터넷 카페 등의 링크와 키워드 검색을 통해, 이들 온라인 사이트에서 정부지원사업 관련하여 어떤 정보가 공유되고 컨설팅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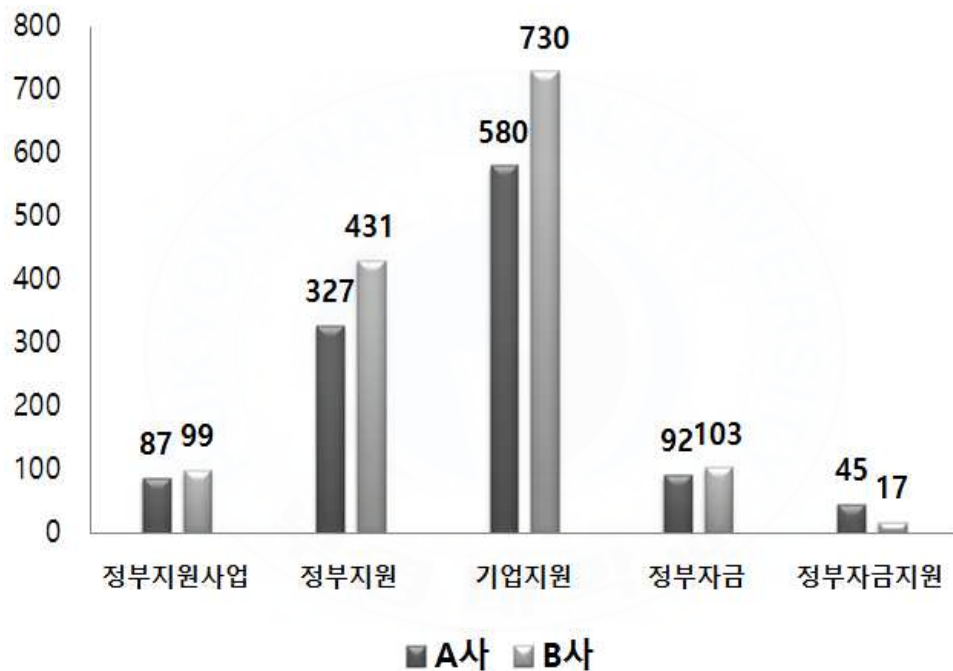


그림 28. 정부지원사업 연관어 관련 웹카페 검색결과(단위: 개)

정부지원사업을 키워드로 하여 카페를 검색해보니 국내 인터넷 대표포털 사이트 2개에 대한 결과는 위와 같이 나타났다.

A사는 정부지원사업 87개의 관련 카페가 검색되었고 키워드를 ‘정부지원’ 327개, ‘기업지원’ 580개, ‘정부자금’ 92개, ‘정부자금지원’ 45개로 나타났

으며 B사는 A와 같은 순서대로 99개의 관련 카페가 검색되었고 ‘정부지원’ 431개, ‘기업지원’ 730개, ‘정부자금’ 103개, ‘정부자금지원’ 79개로 검색 되었다.

또한 인터넷 카페 게시 검색되는 글이 두 군데에서 각각 123,000건과 35,798건이 검색되었다.



그림 29. 인터넷 검색화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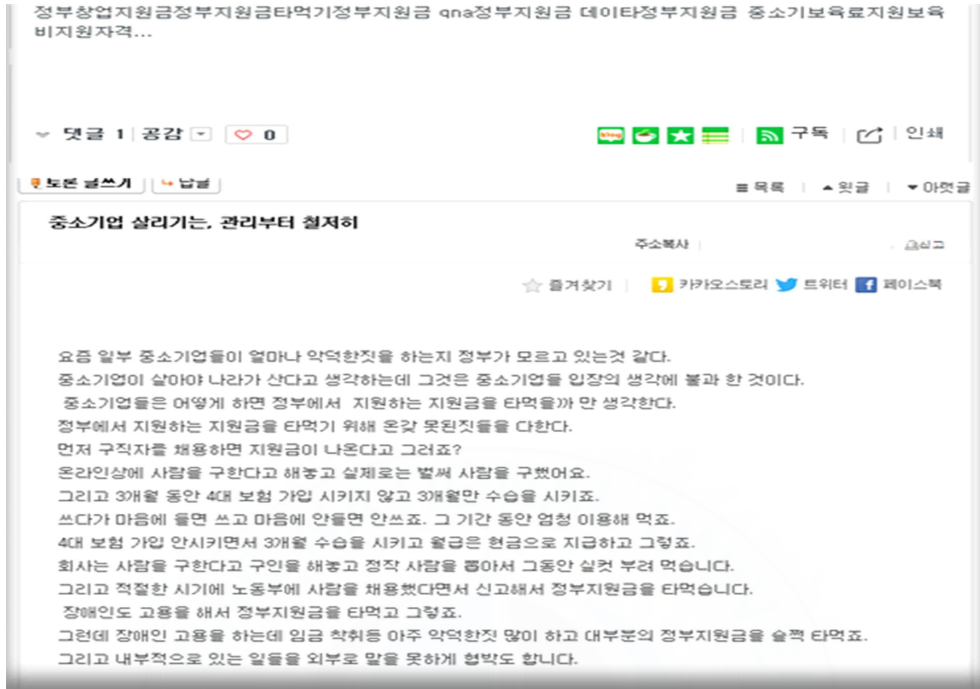


그림 30. 인터넷 검색화면 2

상당한 분량의 정보들이 정부지원자금을 쉽게 획득하기 위한 요령을 컨설팅하거나 자문하는 내용이었으며, 그 속에는 <그림 30>처럼 정부지원자금을 쉽게 받아내어 건설한 기업의 지원기회를 앗아가는 좀비기업을 비난하는 내용도 있었다.

이런 경향이 만연하는 원인으로는 현행의 지원체계 속에서 좀비기업이더라도 요령만 습득하고 대응만 잘하면 지원 제외대상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다.

실제로 현재의 지원체계 하에서는 절차에 대한 문제만 해결해 나간다면 많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에서의 정보공유보다는 부정적인 면에서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는 측면이 많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이중에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카페도 있고 비영리의 목적을 가진 단순공유의 홈페이지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사업자들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들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컨설팅을 통해 건전한 기업으로 진행해야 할 기업들이 오히려 좀비화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지원체계 속에서 좀비기업의 선별 및 추정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므로, 일괄적이고 단순한 형태의 절차 지향적인 현재의 지원체계가 보다 적응적이고 기업 특화된 분석적 형태의 지원체제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과 기업 네트워크의 구축도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좀비화 영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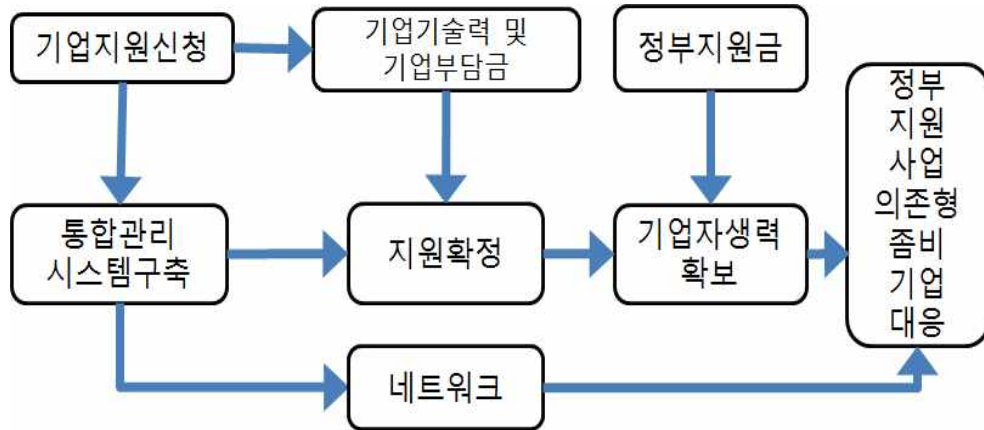


그림 31.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의 대응

위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결과를 토대로 우선적으로는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선별과정을 마련하고 두 번째로는 체계 개선 방안을 통해서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을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세 번째로는 기업이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분담하는 지원체계 및 발전적 정보의 공유 네트워크가 구축 된다면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을 효과적으로 추정하고 이들의 지속적인 좀비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Ⅲ. 결론

1. 결론

지금까지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좀비기업은 다양한 기준을 토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 할 수 있으며, 이에대한 추정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거 이자보상배율을 통한 제조기업의 연도별 좀비기업 비중 추정결과를 보면 제조업은 대기업의 경우, 2001년에는 좀비기업 수 비중이 12.4%에 달하였는데, 계속 하락하여 2004년에는 6.8% 수준에 달한 후 다시 상승하여 2007~08년 12%를 상회하였다가 2009년에는 9.2% 수준을 기록하였다.

제조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좀비기업 수 비중이 2001~09년 기간 동안 큰 변동 없이 9~11% 수준을 유지하였다.

금융정책을 통한 지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보상 배율이라는 도구로 좀비기업(한계기업)의 규모를 추정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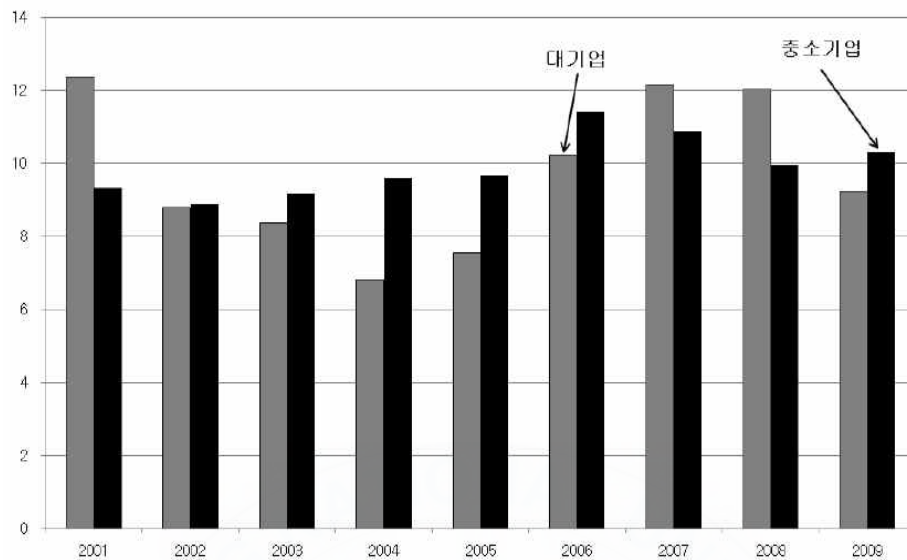


그림 32. 제조업: 기업규모별 좀비기업수 비중 추이 (%)



그림 33. 한계기업 자산비중추이

출처: 한국신용평가



그림 34. 대기업에 대한 국책은행 금융지원 비중

출처: 한국신용평가

하지만 본 논문은 일반적인 좀비기업의 정의와 이들의 현황파악보다는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의 정의와 현황파악에 집중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지원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많은 매체를 통해 자주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비기업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좀비화 되는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다양한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은 지원 후 폐업기업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의 규모와 건수를 고려하여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 중 지원받는 금액이 매출액 기준 비중이 5% 이상(전체수혜기업의 19% 범위 내) 되며, 기업당 지원건수 기준 3건 이상이 되는 기업군들 속에 많은 수가 분포해

있다고 추정되며 이들 기업 중에서 매출액이 5억 미미만이고,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기업일 경우 특히 그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위치한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물론 매출액과 고용인원이 소규모인 영세기업이 정부지원사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비대상 기업군의 영역이 이들 기업과 넓은 범위에서 중첩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들 영역 속에서 대상 기업을 발견해 내는 것이 아니라 발견된 기업이 이들 영역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의 마련에 있는 것이다.

국내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다. 이러한 산업구조에서는 좀비기업의 비율이 당연히 영세기업일 가능성이 높다.

2006년 산업연구소 보고서에도 나타난 것처럼 영세기업의 증가가 좀비기업화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했다.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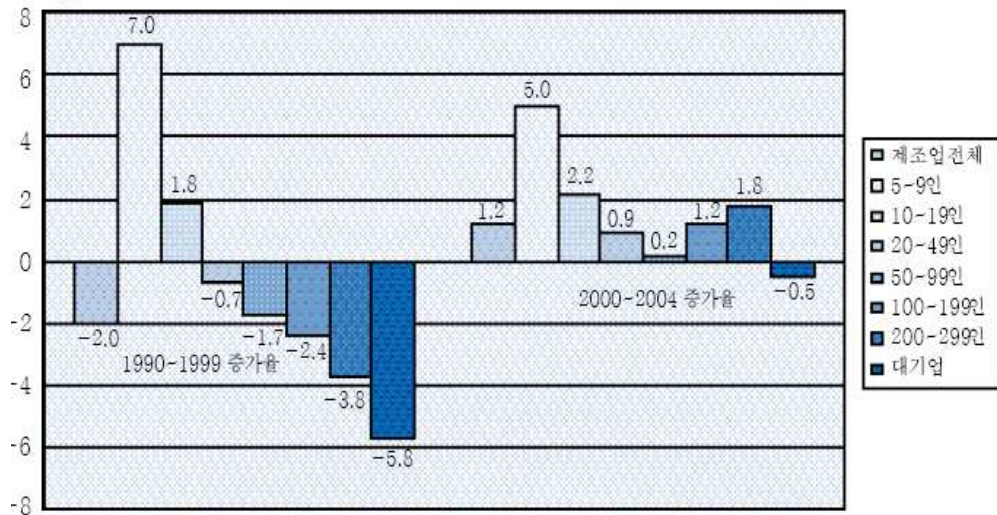


그림 35. 제조업 기업규모별 종사자 수 연평균 증가율

출처 : 통계청,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각 연도.

흔히 부실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좀비기업의 경우는 대부분 금융권의 자금지원과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대기업들이 많다.

한 사이트에서는 국내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10% 가량이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대기업 계열사들 까지 포함하면 800개 정도의 좀비기업을 퇴출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최근 좀비기업(자금지원을 받은 잠재 부실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부실기업의 자금지원은 정상기업의 지원효과를 저하시키고 지원금 낭비로 인한 필요기업의 자금금 축소로 이어져, 관련 기업의 외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원사례 검토를 통해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금융권에서 말한 좀비기업을 판단하는 기준과 달리 지원사례의 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기준을 제시하여 이들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의 범위를 추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기업이 정부지원사업을 중복해서 받기 위해 컨설팅 기업을 활용하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향상을 위한 자금투입이 아닌 형식적 지원의 제공으로 인한 자금 낭비로 변해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유사 중복성이 많은 지원책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대응방안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물론 유사중복성으로 인해 좀비기업이 만연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를 기회로 활용하는 좀비기업의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한 중복 수혜만을 좀비의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좀비기업이 의존할 수 있는 기반을 줄여나가야만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거라 판단된다.

반대로 좀비기업으로 추정 할 수 있는 기업 중 실제 좀비가 아닐 수도 있는 기업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 이자보상배율이라는 기준 한 가지만으로는 해당 기업을 좀비기업으로 규정하기에는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자보상배율은 그 회사가 얼마나 많은 빚(부채)을 지고 있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업종 성격에 따라 기본적으로 빚이 많은 산업이 있기도 하다.

일 예로 비싼 항공기나 선박을 사거나 빌려서 운영하는 항공사나 해운사는 다른 업종보다 부채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아진 회사도 있을 것이다. 투자 때마다 성공할 순 없으니, 잘 해보자고 투자를 했다가 어려워진 기업이 좀비기업으로 몰린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

경기순환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도 좀비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도 추정은 가능하지만 확정짓기는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체계와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 종합적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들 간의 원활한 업무협조와 조정이 필수적이지만, 만족할 만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공급자 중심의 정책 시행으로 인하여 지원 대상의 선정과 지원 시기의 부적합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중소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정책 프로그램과 지원 조직의 운영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

정책 수요자인 중소기업들이 혁신에 필요한 기술, 자금, 인력,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기능별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의 여러 지원 프로그램들을 통합하여 패키지 형태의 지원프로그램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유형별로 차별화된 지원을 위해 해당 기업들의 특성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들 각각의 유형에 적합한 통합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정부지원으로 인해 좀비기업은 점차 늘고 있지만 좀비기업으로부터 탈피

할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사례와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림 20> 연속
좀비추정기업 연도별 매출 규모 변화 비교를 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급변하고 있는 외부효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효율적 개선을 위해 보다 확실하고 효율적인 기업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과 통합정보시스템의 개선, 사전 심의를 통한 기업지원정책의 점진적 개선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을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고 중소기업육성과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정책의 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통한 장기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와 맞물려 관련 제도 등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좀비기업을 분석하는 데이터는 대부분 대기업이나 상장기업을 통한 자료들이 많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2개 년도에 걸친 지역 내 중소기업 대상의 분석 자료로는 보다 정확한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을 추정하기에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향후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기준에 맞는 데이터를 확보한 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유형별 좀비기업에 대한 자료와 정의가 보다 심도있게 내려진다면 정부지원사업의존형 좀비기업의 추정은 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좀비기업으로 인한 자금지원의 효율성 확보도 이를 수 있을 것이다.

2. 시사점

정부지원사업이 기업 자생능력을 키우는 수단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기업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

이는 그러한 기업이 본 연구의 대상인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으로 변해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기업 스스로가 판단하지 못하여 기업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정부부처 및 관리기관에서 정부지원기업의 지원사항에 대한 정확하고 장기적인 DB구축을 통해 기업검증 절차 마련, 건강하고 건실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향후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이자보상배율과 기업지원액 비중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면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 추정에 보다 정확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운 R&D 6대 패러다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6대 패러다임은 R&D 포트폴리오 혁신 및 전략성 강화, 성과창출 중심 투자, 산업생태계 중심 R&D 수행, R&D와 상용화 정책수단 연계, 민간 주도 사업 기획·운영, 평가관리 체계 혁신 등이다.

표 12. 6대 중소·중견기업 R&D 패러다임 전환

기존 패러다임		新 패러다임
이슈·상황에 따라 사업 확대	➡	R&D 포트폴리오 혁신 및 전략성 강화
R&D 저변확대 지원 위주	➡	성과창출 중심 (신성장동력, 수출) 투자
개별기업 중심 R&D	➡	산업생태계 (산학연 협력) 중심 R&D 수행
R&D 개별 지원	➡	R&D와 상용화 정책수단 연계 (R&D + 자금·마케팅·인력)
정부 주도 사업 기획·운영	➡	민간 주도 사업 기획·운영
획일화된 R&D 평가·관리	➡	전문성 및 성과 중심 평가·관리체계 혁신

정부는 6대 패러다임을 통해 R&D 지원금으로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 기업의 퇴출 작업을 본격화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R&D 전략성 강화는 편중된 지원방식을 개편하는 데 그 목적을 뒀다. 정부는 기존 기업이 개발 분야와 목표 등을 설정하는 자유응모 위주의 자원체계를 개편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정부정책의 전략성과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가 접목될 수 있도록

록 신성장동력 분야 등에 대한 전략형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동·협력 R&D도 확대된다.

정부는 협의회, 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동애로기술을 개발, 확산하는 한편 산·산, 산학연간 공동 R&D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많은 기업들에 R&D 자금을 골고루 배분하던 기존 방식도 변경된다.

정부는 신산업 창출, 주력산업 고도화, 제품의 서비스화 등으로 R&D 중점 투자분야를 나눠 R&D 지원사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산학연 협력을 통해 부족한 혁신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산학연 중심의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한다.

평가관리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R&D 평가위원 중 현장에 정통한 산업계 비율을 현행 28%에서 80%까지 확대하고 평가위원 제척기준을 합리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R&D 과제가 종료된 이후 실시되는 최종평가에서 사업화 가능성을 중점 평가한 뒤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정책의 최종적인 목표는 기업을 위한 지원강화이며 성과도출 및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다.

이처럼 정책의 방향이 지원기업을 관리하고 부실기업을 검증하는 체제로 개편되어진다고 예상된다.

중소기업 지원은 지원기관들 간에 역할 및 기능의 불명확성과 지원체계의 중복성 문제로 인해 각종 지원시책들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 지원과 지원기능 및 역할 조정, 관련 법 제도 개선, 지원기관 간 지원업무 및 기능을 명확히 하고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으로 중소기업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지원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인 기업운영을 위한 자금지원과

안정적인 판로·수출 지원, 끊임없이 발전하는 기술개발과 이를 상용화하여 사업화 단계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부문은 보다 신중하고 엄격한 논의를 통해 효율적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로 인해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을 배제한 지원시책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을 기대한다.

중소기업지원에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 지원시책을 중심으로 지원체계와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만들어야 하며, 지원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유사 중복성 지원을 최소화하고, 현행 정책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으로 인한 더 큰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의 밑그림을 제시 후 단기성과에 치우치지 말고 장기적인 상황과악과 분석을 통해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과 선제적 좀비기업을 배제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기업 스스로 좀비기업화가 되지않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에 앞서 어떻게 좀비기업이 됐는지, 정부는 그동안 어떤 금융 지원을 해 왔는지, 좀비기업에 대한 처리는 좀비기업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히 한 후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한 좀비기업의 명확한 기준이 결정되면 해당 기업들 중 성장성 한계에 도달하고 수익성이 약화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구조조정 하고 금융기관이 좀비기업을 배제하고 신생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하도록 정책안을 마련해서 정부지원사업의 정책 효율성 강화와 동시에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여러 결과와 시사점도 불구하고 추후 보완을 통해 보다 확실한 좀비기업의 추정방법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의 발견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추정해 보았으며 제한적이거나 결과를 통해 실제 폐업에 처한 좀비기업이 해당 영역에서 발견됨을 일부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현재의 데이터는 지역에 한정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도출된 결과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특히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이 일반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이 미미한 상태이다.

수많은 정부지원사업의 정책방향과 지원실적 및 지원성과에 대한 장기적인 자료가 마련된 후 다양한 분석기준을 설정하여 정부지원사업 의존형 좀비기업의 분포군 추정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보다 확실하게 좀비기업 기준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기업의 기준 즉, 금융권에서는 이자보상 배율 기준 등을 토대로 다양한 좀비기업 기준과 지표를 설정하는 것과 같은 보다 나은 성과 도출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준경(2011),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방향” 금융경제연구원 2011.2 working paper 제458호
- 김동준, 이종하, 김동립(2014), “ 정부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 : 지역산업지원사업 수혜기업을
- 김성태(2008),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 분석 : 충북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0집 1호
- 김구희, 원유호 (2015). “지역산업진흥정책의 산업별 기업지원 성과 영향요인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9(2), 31-51
- 노용환, 송치승(2014), “중소기업지원형 R&D 사업의 성과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7(6), 2403-2429.
- 엄진웅(2013), “ 좀비기업의 생산성 감소 요인에 대한 연구 : 한국의 ICT 산업을 중심으로 “, 경제학연구 중심으로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 위세안(2011), “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이 중소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 경영학 연구
- 이병현, 장지호(2006),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고찰:기술혁신신인 관점“,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6권 제1호 107~138)
- 이재현, 고승희(2009), “중소기업 지원실태와 지원체계 개선방안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9(7)
- 장우현(2016),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KDI 보고서 통권 제63호
- 정대희(2014), “부실기업 퇴출 지연의 부정적 파급효과”, KDI 보고서 연구 보고서 2014-03, 5절

- 정대회(2014), “끔찍한 좀비기업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KDI 보고서 나라
경제 2015-12호
- 조덕희(2006), “중소 제조기업의 영세화 현황과 대응” e-kiet 산업경제정보
제320호(2016.11.30.)
- 최대승, 홍길표, 이흥권(2011), “중소기업 대상 정부 R&D 사업의부처간 유
사·중복 문제와 해결 방안 모색”
- 최대승(2014), “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지원의 정책효과 분석연구” 한
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보고 2014-030
- 신동호, 홍진기(2014), “효율적인 기업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방안” 한국
산업관리공단 산업입지 2014 vol.54
- 중소기업청 발표자료(2016),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
한 민간 중심의 R&D 패러다임 전환” 중소기업청 발표자료 2016.3
- Michael M. Crow, Mark A.Emmeri, Caroll. Jacobson(1990),
“Government-Supporte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s
in the United States”, Policy Studies Journal, VoL 19, No, 1, Fall
1990,59-74
- Taylor C. Nelms(2012), “THE ZOMBIE BANK AND THE MAGIC OF
FINANCE or : how to write a history of crisis”
Journal of Cultural Economy, Vol. 5, No. 2, May 2012